

표지와 같은 도비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날짜 확인해주세요!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입니다.

최근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공항테러로 국가적 테러에 대한 위기와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과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학술적 연구활동과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본 학술지를 통해 포괄안보의 위협상황과 4차 혁명에 따른 융합적 학문·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와 국민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테러조직, 경호, 경찰, 민간경비 관련된 논문을 수락해주신 교수님과 여러 전문가 학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모쪼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 3호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연구자분들과 백산출판사, 학회 관계자 및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30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윤민우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차 례

-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이치영·김우진·권혁빈 7
-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양덕열·양영모·이창후 37
-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희영·손영각·조민희 69
- 경찰의 민간경비 감독명령 개선방안
정지덕·하정훈·김영현 99

Contents

-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Lee, Chi Young·Kim, Woo Jin·Kwon, Hyuck Bin 7
- Establishing a system for training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Yang, Duk Yeol·Yang, Young Mo·Lee, Chang Hoo 37
-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roblems of use of security equipment
Ku, Hui Yeong·Son, Yeong Gak·Jo, Min Hee 67
- Improvement of Supervisory Command of Private Security by Police
Jung. Ji Deok·Ha, Jeong Hoon·Kim, Young Hyun 99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이 치 영 · 김 우 진 · 권 혁 빈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이 치 영*·김 우 진**·권 혁 빈***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요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인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각 기관들의 임무를 명시한 기관별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분석하고, 한·미 테러조직과 기능을 비교, 그 차이점과 테러사건 이후 변화에 따른 한국 대테러조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조직은 국외, 교통,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복구 및 구조, 해양, 화학, 생물학, 방사능테러에 대해 기관별 공통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교육과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교육을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적 전문교육기관인 연방법집행 교육센터에서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 장비개발, 정보분석 등 유형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역량 개선과 인력, 물자자원 확보, 교육, 장비개발 등 표준화된 대테러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협조 및 조정, 감시활동에 대한 업무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달리 한국의 정보활동기관들의 통합적 관리 및 거버넌스체제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테러, 대테러, 테러리즘, 대테러조직, 테러방지법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제1저자)

** Texas State University 이학박사 연구원(교신저자)

*** 前한국행정연구원(공동저자)

| 목 차 |
|-------------------------------|
| I. 서 론 |
| II. 미국의 대테러 조직 |
| III. 한국의 대테러 조직 |
| IV. 한·미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

I. 서 론

21세기가 시작된 후 2001년 9.11테러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인들에게 가장 크고 대표적인 테러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테러사건은 9.11테러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며 다양한 형태와 수단을 사용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개인, 조직,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뿐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점차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며 끊이지 않는 테러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1년 알카에다(Al-Qaeda)에서 시작된 국지적이고 방어적이었던 테러조직의 활동은 2013년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의 이슬람국가인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또는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등장 후 국제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으로 변화되었으며, 그들의 이념과 활동을 SNS,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파리 테러, 브뤼셀 테러와 같은 국제적인 테러를 선동,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테러리스트, 테러단체 및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조직, 국가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신설,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IS가 지목한 보복 대상국인 ‘십자군 동맹 62개국’ 중 하나로, 지난 해 1월에는 김모군이 IS에 가담했으며, 최근 IS 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과 IS 지지자 10명이 적발되었고, 얼마 전에는 테러 단체 ‘알 누스라’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으며, 지난 5년간 테러관련 인물 53명이 강제 추방되는 등 우리나라도 국제적 테러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국제테러단체를 지원한 북한은 최근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테러준비를 지시하는 등 연계한 국제테러단체의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되었던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대테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지난 2008년 2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테러자금금지법)과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대테러활동을 지원하고 기관별 국내외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대테러 관련 법적, 제도적 재정비와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기존 국제테러 사례에 근거하여 항공기테러, 해양테러, 생물테러, 화학테러, 원자력테러 등 각 분류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법적, 제도적 한계점으로 인해 이후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 16년간의 논쟁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법적 토대와 권한 안에서 대테러조직의 구성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 내 국제테러단체가 주도하는 테러사건의 전례가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정하던 각 기관별 조직의 임무를 답습한 법령의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테러 조직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요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인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각 기관들의 임무를 명시한 기관별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분석하고, 한·미 테러조직과 기능을 비교, 그 차이점과 조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II. 미국의 대테러조직

1. 설립배경

9.11테러 발생 전 미국의 안보관은 주로 국외, 국제적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집중되어 있었고,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는 1861년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내의 현저한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점과,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를 거치며 국외, 국제적 문제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주로 타국 영토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본토의 안보보다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 경제이익, 국제사회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그간 많은 국토안보기관의 창설이 제기되어 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993년 2월 26일 세계무역센터 지하 2층에서 타이머를 장착한 차량폭탄테러가 감행되어 6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이러한 테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연방수사국(FBI)의 뉴욕지부에 테러사건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사건조사와 향후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체제는 기존의 전통적 안보환경에 기반한 대응체제는 독립된 각 기관과 부처에서 행정적, 법적 권한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결국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자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조직을 창설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제점으로는 CIA, FBI와 같은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역량과 방향, 통합적 검토, 분석, 공유활동이 미흡하며, 취약한 국경보안과 이민통제, 항공안보체계의 문제, 그리고 기관별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테러대응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국토안보에 대한 인식과 담당기관의 재조직화, 개혁이 추진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를 통해 정보활동과 작전계획수립에 대한 활동을 통합하고, 정보기관들을 국가정보국장(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휘하에 통일하며,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통일하고 공유하는 정보통합, 정보공유체계 개선과 정기적 위협평가, CIA, FBI의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여 테러 뿐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 이후 미국의 대테러조직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정보의 통합과 수집, 분석, 공유를 담당하는 정보조직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경찰, 군, 국토안보부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조직은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장으로 한 국가정보실(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서 국가대테러센터(NCTC), 정보공유 환경센터(ISE),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센터와 하부조직을 통해 조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통일의 형태로 운영되는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인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DIA, 지형정보부(NGIA), 국가정찰실(NRO), 국가보안부(NSA), 에너지부(DoE), 국토안보부(DHS), 국무부(DoS), 통상부(DoT), 마약단속국(DEA), 공군, 육군, 해군, 해병, 해안경비대의 16개 기관의 정보통합, 공유, 분석,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응조직으로는 군, 경찰과 함께 국토안보부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창설까지의 주요과정은 다음 <표 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국토안보부 창설과정

| 일시 | 내용 |
|------------|--|
| 2001.9.11. | 9.11테러 |
| 2001.10.08 | 국토안보실(Office of Homeland Security) 및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uncil) 설립 |
| 2001.10.11 | 상원의원 Liberman의 국토안보법안 제안 |
| 2001.10.26 | 애국법 제정(USA Patriot act, Public Law 107-56) |
| 2001.11.19 | 미국 운송보안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설립 |
| 2002.05.02 | 의회의 국토안보법 제안 |
| 2002.06.02 | 대통령의 국토안보법 제안 |
| 2002.07.16 | 국토안보 국가전략 발표 |
| 2002.11.19 | 의회 국토안보법 통과 |
| 2002.11.25 | 국토안보법 서명(Public Law 107-296)과 국토안보부 창설 |

가장 먼저 9.11테러 1개월 후인 2001년 10월 ‘행정명령 13228(Executive Order 13228)’을 발표하여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국토안보전략의 달성과 발전, 조직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에 국토안보실(Office of the President)을 설치하고, 국토안보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설립하였고¹⁾, 동월 상원 의원인 조 리버만(Joe Liberman)의원과 알렌 스펙

터(Arlen Specter)의원이 국토안보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S.1534)를 발의하였는데, 이 시기까지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토안보법의 창설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윤지영, 2013).

이후 2001년 10월 26일에는 일명 애국법(USA 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²⁾이라 불리는 반테러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보안, 감시절차, 국경보안의 강화, 테러자금차단, 테러정보수집, 정보공유, 처벌 등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테러활동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항공 및 운송보안에 관한 법률(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lic Law 107-71)을 제정하여 항공보안검색, 여객기 보안요원고용 등을 의무화하고, 미국 운송보안국을 설립하였다³⁾.

2002년 5월에는 조 리버만(Joe Lieberman)의 주도로 양원, 양당이 초기에 제시된 법안을 구체화시켰고⁴⁾, 대통령실에 설립된 국토안보실을 이전하여 독립적 조직으로 국토안보부 창설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국토안보실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독립적 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백악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일 단락되었다⁵⁾.

그러나 2002년 6월 FBI요원 콜린 로울리(Coleen rowley)의 증언으로 9.11테러 공범이었던 자카리아스 모사위(Zacarias Moussaoui)의 조사결과가 FBI에 의해 목살되었다는 사실이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비난과 질책 안에서 공개되며 국토안보의 취약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이는 정보공동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일련의 사건 이후 결국 국토안보부의 독립적 창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행정부 주도의 창설계획에 따라 하원에서 22개 기관을 통합하는 법안(H.R. 5005)을 제안하였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2002년 11월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국토안보부(DHS)

1) Executive Order 13228 (<https://fas.org/irp/offdocs/eo/eo-13228.htm>, 2016년 11월 17일 검색).

2) USA Patriot act, Public Law 107-56.

3)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lic Law 10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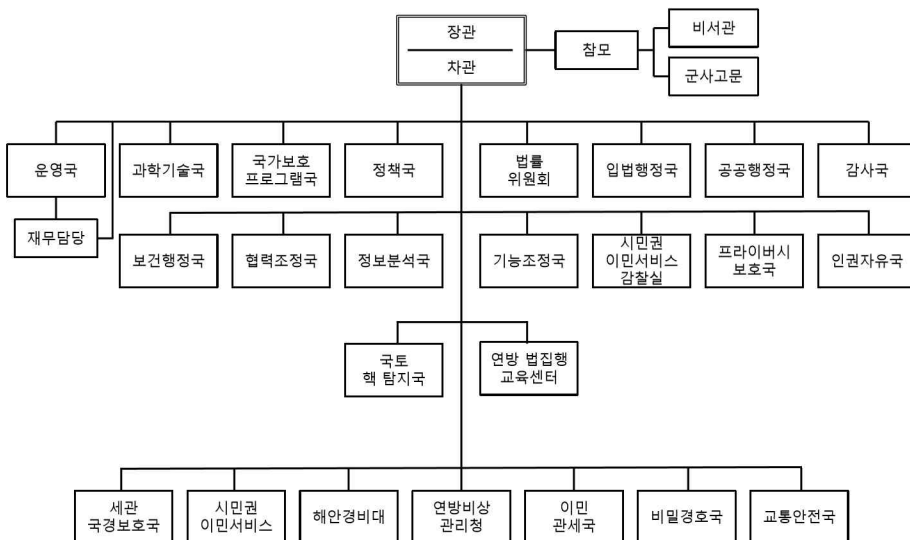
4) Lieberman, Senator J.I., National Homeland Security and Combating Terrorism Act of 2002: Bill Summary.. Lieberman Press office(2002) Retrieved from.

5) AriFleischer, WhiteHousePressSecretary, Press Briefing(2001년 10월 2일).

가 창설되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며, 미국의 15번째 행정기관으로써 국토 내 테러리즘 예방과 보안강화, 국경보안 및 관리, 이민관련 법 집행관리, 사이버보안, 재해재난 복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⁶⁾.

2. 조직구성



<그림 1> 국토안보부 조직도

※ 출처 : dhs.gov(국토안보부 홈페이지 2016.12.17.검색)

위 <그림 1>은 국토안보부의 조직도이다.

국토안보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를 보좌하는 국토안보부 차관과 참모인 비서관, 군사고문으로 구성된 장관실이 있으며, 상원의 동의와 검토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정보분석 및 기반시설보호차관(Under Secretary for 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과학기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국경&교통차관(Under Secretary for

6)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dhs.gov, 2016년 12월 17일 검색).

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 비상대비대응 차관(Under Secretary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시민권 이민서비스 국장(A Director of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운영차관(An Under Secretary for Management), 12명 이하의 차관보, 법률위원회에 임명되는 총괄법률고문의 차관을 임명하고, 감사관(Inspector General), 해안경비 사령관(Commandant of the Coast Guard), 비밀경호 국장(A Director of the Secret Service), 정보책임관(A Chief Information Officer), 재무담당관(A Chief Financial Officer), 인적자원책임관(A Chief Human Capital Officer), 인권자유담당관(An Officer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이 각각 해당 부서의 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⁷⁾.

국토안보부는 크게 국경교통안전분야, 비상계획 대응분야, CBRN⁸⁾ 대응분야, 정보분석 및 기반시설보호분야, 운영분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경교통안전분야는 ① 테러리스트의 입국과 테러도구의 유입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② 이민관련 업무관리 및 세관업무의 효율적 시행, ③ 합법적 운송과 상업 활동의 효율성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계획 및 대응분야의 경우 ① 긴급상황 대비 준비태세의 확보와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평가, ② 대형재난에 대한 지휘, 의료 지원체제 감독, ③ 연방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강화, 상호 운용이 가능한 통신기술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BRN의 경우 ① 테러공격의 탐지·예방을 위한 국가적 연구개발 지원과 정책지원의 우선순위결정, ② 지방정부에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정보분석 및 기반시설 보호분야는 ① 정보의 통합, 분석, 테러위협 평가, 잠재적 테러리스트 색출과 ② 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 보호 우선순위선정과 예방, 대응방법 모색, ③ 국가 차원의 보호계획의 수립, 효율적 보호방안 강구, ④ 국토안보 자문시스템의 감독, 지방정부에 위협경고 정보 및 대응책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분야는 ① 테러대응에 관한 인적·물적자원의 관리 업무와 ② 주 지방정부 및 민간분야와의 업무조정, 지휘, 테러 경고·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 조직으로는 운영국, 과학기술국, 국가보호 프로그램국, 정책국, 법률 위원회(General Council), 입법행정국, 공공행정국, 감사국, 보건행정국, 협력조정국, 정보분

7) PUBLIC LAW 107-296—NOV. 25, 2002, SEC. 103. OTHER OFFICERS.

8) 화학(Chemical), 생물학(Bacteriological), 방사능(Radiological), 핵(Nuclear)을 말한다.

석국, 기능조정국, 시민권&이민서비스 감찰국, 프라이버시 보호국, 인권자유국, 국토
핵 탐지국, 연방법집행 교육센터, 세관 국경보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 해안경비대,
연방비상관리청, 이민관세국, 비밀경호국, 교통안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한국의 대테러조직

1. 설립배경

한국의 대테러조직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
에 대한 테러방지를 위하여 1982년 1월 22일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
침」의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 하 테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인 상임
위원회,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테러사건 대응조직
인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대화생방 특수임무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조직
이 구성되었다.

<표 2>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대테러조직 변화

| 2008.1.22 | | 2012.2.9 | | 2013.5.21 | | 2015.1.23 | |
|-------------|-----|--------------|-----|--------------|-----|--------------|-----|
| 담당기관 | 유형 | 담당기관 | 유형 | 담당기관 | 유형 | 담당기관 | 유형 |
| 교육과학 기술부 | 방사능 | 원자력 안전위원회 | 방사능 | 원자력 안전위원회 | 방사능 | 원자력 안전위원회 | 방사능 |
| 외교통상부 | 국외 | 외교통상부 | 국외 | 외교부 | 국외 | 외교부 | 국외 |
| 국방부 | 군사 | 국방부 | 군사 | 국방부 | 군사 | 국방부 | 군사 |
| 보건복지 가족부 | 생물 | 보건복지부 | 생물 | 보건복지부 | 생물 | 보건복지부 | 생물 |
| 환경부 | 화학 | 환경부 | 화학 | 환경부 | 화학 | 환경부 | 화학 |
| 국토해양부 | 항공기 | 국토해양부 | 항공기 | 국토교통부 | 항공기 | 국토교통부 | 항공기 |
| 경찰청 | 일반 | 경찰청 | 일반 | 경찰청 | 일반 | 경찰청 | 일반 |
| 해양경찰청 | 해양 | 해양경찰청 | 해양 | 해양경찰청 | 해양 | 국민안전처 | 해양 |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
의 권한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주장과 국민적

의식이 증대되었으며, 대테러활동 중 정보활동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자 2005년 지침의 개정을 통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배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설립되었다.

2008년에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긴급구조대를 설치하고, 테러사건 협상요원의 양성·확보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방사능테러 대응에 관한 주무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임무 및 기능을 이관하고, 화생방대응 특수임무대를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개정하였다.

이후 2013년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임무·기능 중 일부를 이관하고, 2015년에는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개편하고, 인명 구조 및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등에 관한 임무를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에 따라 대테러 전담조직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기관별 대테러예방과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대테러 전담조직

대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시하는 회의기구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테러센터와 테러정보수집과 전파 등 업무를 담당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공항·항만의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대테러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와 지자체의 대테러업무 지원과 협조를 위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그리고 각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5개의 테러사건대책본부(국외 : 외교부, 국내일반 : 경찰청, 군사 : 국방부, 해양 : 국민안전처, 항공 : 국토교통부), CBRN(Chemical, Bacteriological, Radiological, or Nuclear)관련 특수상황 지원하는 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보건복지부 : 생물학, 환경부 : 화학,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구조·구급·소방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테러복구 지원본부,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통제하는 현장 지휘본부와 테러진압 및 대응활동을 위한 특공대(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응급

상황 및 인명구조를 위한 테러대응구조대 및 대테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대테러 합동조사팀(국정원, 군사의 경우 국방부)으로 구분되어 있다.

1) 대테러센터⁹⁾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의 기관으로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과 대테러정책관 1명¹⁰⁾과 4개의 하부조직 내 국방부, 국정원 인원을 포함한 7명, 경찰공무원 6명(경찰청), 소방공무원 1명(국민안전처)과 외무공무원 1명(외교부), 국무조정실 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되어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에 관한 사항,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다¹¹⁾.

또한 2005년 4월 설립된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대테러센터의 하부조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며,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테러 위험 징후 평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역테러대책협의회¹²⁾

지역테러대책 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시·도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

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10)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3.

1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검찰청 및 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지역 관할 군부대 및 기무부대의 장,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보안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해당 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및 대응·사후처리 지원 대책, 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 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 방안, 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점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¹³⁾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두며, 의장은 해당 공항·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은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기관의 장과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보안 책임자, 그 밖에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되며,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공항 또는 항만 내 시설 및 장비의 보호 대책, 항공기·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테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3조

관계기관의 장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교부

외교부는 장관을 보좌하는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정책기획관, 감사관과 1차관, 2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을, 2차관은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국제안보대사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국제기구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문화외교국, 재외동포영사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변화환경외교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테러 관련 부서는 2차관 소속의 재외동포영사대사와 국제안보대사가 각각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개선사항¹⁴⁾,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¹⁵⁾을 관장하고, 국제기구국의 국제안보과에서 국제안보와 대테러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외교정책수립, 시행,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¹⁶⁾, 재외동포 영사국 내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재외국민 보호, 국외사건사고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 총괄,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¹⁷⁾ 재외국민 안전과에서 국외위난상황과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과 협조 및 국제협력,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사고 예방 및 홍보를 통하여 국외 재난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와 예방,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¹⁸⁾. 또한 1차관 하부조직인 기획조정실¹⁹⁾ 내 조정기획관 소속의 재외공관담당관이 재외공관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업무(점검, 보완대책 마련 등)를²⁰⁾, 비상안전담당관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와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²¹⁾.

1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1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1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제10항.

1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1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1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2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7항.

2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7항.

5) 경찰청

경찰청은 2002년 10월 5일 테러대응기능보강을 위해 경비국 경비2과에 408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2005년 7월 5일 대테러센터 부서를 창설하여 해당 임무를 독립적으로 실시하다가, 2011년 5월 9일 경비국 대테러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명칭을 수정하여 국내일반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²²⁾.

위기관리센터는 대테러관련 법령, 종합대책, 훈련 및 교육,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대테러활동 시 주요 부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³⁾.

경찰청의 대테러부대는 대통령훈령 제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KNP SWAT: Korea National Police SWAT)가 설치되어 현재는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의 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되어 일반 테러에 대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 국토교통부

(1) 항공

국토교통부는 장관 예하 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의 소관업무를,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²⁴⁾.

국토교통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항공테러에 대해 대책본부를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 내 관련 부서로는 항공정책실에서 그 임무를 담당하여 항공, 항행, 공항시설, 보안검색, 교육훈련,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²⁵⁾.

세부적으로는 항공보안과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항공보안검색, 점검, 협력, 항공화물 보안,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대테러 전담부서로 역할을 실시하고 있다²⁶⁾.

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2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2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관련 부서로는 항공안전정책과에서 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²⁷⁾, 공항안전환경과에서 공항 및 비행장시설 안전관리, 재난·재해대책,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²⁸⁾,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²⁹⁾ 보안과에서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과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철도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관련 대테러 업무는 2차관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철도차량 정비, 안전관리, 위험물운송, 질서유지 및 방범, 다른 기관과의 철도범죄 수사협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업무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³⁰⁾.

또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대테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³¹⁾.

7) 국민안전처

(1) 해양테러

국민안전처는 해양테러에 대한 대책본부와 테러복구지원본부,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³²⁾.

해양테러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며³³⁾, 안전본부 내 해양경비안전국³⁴⁾ 해양경비안전총괄과가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항을 제외한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고³⁵⁾, 해양경비과에서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해양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0항.

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5항.

2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10항.

3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3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19조.

3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3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

35)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³⁶⁾, 해양수색 구조과에서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해양사고 수색구조, 수난대비, 지휘·통제, 구조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³⁷⁾.

해양대테러 관련 부서는 해양경비안전총괄과의 지도를 받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행하는데,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에 경비안전과가 해상경비업무의 총괄, 조정, 지휘를 맡아 해양사고 구조업무를 실시한다.

(2) 테러복구 지원

국민안전처 내 특수재난과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특수재난실로³⁸⁾, 특수재난지원관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³⁹⁾.

(3) 구조·구급·소방

가. 일반구조

일반 구조는 119구조구급국의 119구조과가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하고 소방 및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을 기획·총괄하며⁴⁰⁾, 119구급과에서 응급환자, 구급자원 동원·응급조치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

3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3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3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39) 1.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제외한다)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3.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4.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5.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 지원

6. 특수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참여 및 기술 지원

7. 특수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7의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0)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⁴¹⁾.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며⁴²⁾,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은 특수구조훈련과에서 시행하고⁴³⁾, 119구조상황실이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영하여 현장에서 지휘·조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나. 해양구조

해양구조의 경우 해양구조안전국 해양수색구조과장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122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⁴⁵⁾,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⁴⁶⁾,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2구조대가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인명구조와 실종자수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을 위해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⁴⁷⁾내 시흥, 구미, 울산, 익산, 여수, 서산 총 6개의 화학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⁴⁸⁾.

다. 해양경비특공대

국민안전처 특공대의 경우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 특공대가 해양경찰 해양경비안전본부 내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SSAT : Sea Special Assault Team)로 명칭과 부서가 변경되었으며, 동해, 서해, 남해, 중부, 제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으로 해양경비특공대가 해양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⁴⁹⁾.

4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4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4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45)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4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시행규칙 제22조의2.

4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시행규칙 제19조.

4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시행규칙 제20조.

4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제정].

8) 국방부

국방부는 군사시설 테러대책본부의 편성⁵⁰⁾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⁵¹⁾, 대테러특공대⁵²⁾를 설치, 운영한다.

군사시설 테러대책본부는 합동참모의장이 담당하며⁵³⁾,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이하의 정책기획과에서 대테러대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⁵⁴⁾.

화생방테러 대응은 한·일 월드컵을 앞 두고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와 탄저균 테러 이후인 2002년 창설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⁵⁵⁾, 2013년 군 테러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통해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별도로 지정·운용되고 있다.

대테러부대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대대 및 여단 특수임무대와 수도방위사령부예하 제35특공대대, 각 사단 헌병 특수임무대(舊 헌병 특별경호대)가 담당하고, 해양은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와 해병대 헌병 특별경호대가 대테러부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9) 환경부

환경부는 화학테러에 대한 테러복구지원본부로서 환경정책실 화학안전과에서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⁵⁶⁾.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생물테러대응과에서 생물테러감염병 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생물테러감염병 환자의 관리, 생물테

5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5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 제3항.

5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8조.

5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제3항.

5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5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

5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리감염병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생물테러감염병 검사 및 실험실의 운영,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생물테러감염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화생방테러대응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⁵⁷⁾.

1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테러대응지원본부의 역할로서 방사선방직기 방재환경과에서 방사능테러 예방·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임무를 담당하여 원자력시설 방호, 국제협약이행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⁵⁸⁾.

IV. 한 · 미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1. 비교분석 결과

테러유형에 따른 국가적 비교를 실시한 결과 약 21개의 유형에 따른 대테러조직의 구성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한 · 미 대테러조직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
| 컨트롤타워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국무총리) | NSC, HSC (대통령) |
| 국외 | 외교부 | 국무부 |
| 군사 | 국방부 | 국방부 |
| 항공 | | |
| 철도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국 |
|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 관세청 법무부 | 세관 국경보호국 이민관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 |

5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항.

58)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 | | |
|------|-----------------|-------------------|
| 해양 |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 해안경비대 (해양구조포함) |
| 일반 | 경찰청 | 경찰 |
| 화학 | 환경부 | 보건행정국 |
| 생물학 | 보건복지부 | |
| 원자력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토 핵 탐지국 |
| 복구 | 국민안전처 | 연방비상관리청 |
| 구조 | | |
| 자금 | 금융위원회 | 비밀경호국 |
| 정보 | 테러정보통합센터 | 정보분석국(기관/민간) |
| | | 기능조정국(리더) |
| | | DNI(국가정보실) |
| | | / IC(정보공동체) |
| 조정 | 대테러센터 | 입법행정국(의회) |
| | | 공공행정국(공식연설) |
| 감독 | 인권보호관 | 감사국 |
| | | 프라이버시국 |
| | | 시민권&이민서비스 감찰국 |
| | | 인권자유국 |
| 교육 | | 연방법집행 교육센터 |
| 장비 | 각 기관별 | 과학기술국 |
| 프로그램 | | 국가보호 프로그램국 |
| 정책자문 | 실무위원회, | 정책국(계획) |
| | 지역 및 항공·항만대책위원회 | 법률위원회(법률) |

※ 출처 : 테러방지법 및 국토안보법,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먼저 큰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 대테러조직의 차이점은 국가안보에 대한 통합적 기구의 유무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테러, 국경, 교통, 재해재난, 화재방, 구조 등 다양한 기구가 하나의 통합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이를 대비,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단일 지휘체계에 의한 기관별 유형대응이 아닌 개별적으로 독립된 대책 본부의 편성, 대응,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는 테러 뿐 아니라 국내안보에 있어 전반적인 보안을 담당하며, 한국의 경우 범죄 또는 테러유형에 따라 해당 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테러 유형별 대응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유형별 조직으로는 국외, 교통,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복구 및 구조, 해양, 화학, 생물학, 방사능테러로 국외테러의 경우 외교부와 외무부, 군사테러의 경우 국방부가, 항공, 철도 및 교통테러의 경우 국토교통부

와 교통안전국이, 물품 및 인원출입은 관세청과 법무부의 업무를 세관 국경보호국, 이민관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가 수행하고 있으며, 복구, 구조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하는 연방비상관리청이, 방사능테러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 핵 탐지국이, 해양테러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해양경비대가 유사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화학, 생물학, 감염병테러의 경우 한국은 환경부가 화학테러를, 보건복지부가 생물학테러를 각각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건행정국에서 화학과 생물학 테러 모두를 전담하고 있다.

테러정보수집과 분석, 배포체계에서 미국은 국가정보실(DNI)의 주도 하 정보공동체(IC)에서 생산, 분석된 정보를 국토안보부 내 정보분석국이 이를 수신하여 기관 및 민간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조정국에서 각 부서의 지휘자급 부서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테러정보 수집, 분석과 국가기관에 한정된 테러정보 전파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 각 관계기관별 정보의 통합과 분석, 민간과의 정보활동공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입법행정국을 통해 의회에 국토안보부의 활동사항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공공행정국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활동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연설, 미디어, 방송,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민간 및 언론과의 의사소통, 조정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대테러활동에 대한 협의체인 협의회를 통해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대테러활동에 있어 국경, 이민, 개인정보, 활동사항 등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국, 프라이버시국, 시민권&이민서비스 감찰국, 인권자유국을 두어 인권과 자유권, 개인정보 침해사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인권보호관이 모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대응역량과 규모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과 장비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교육을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적 전문교육기관인 연방법집행 교육센터에서 통합된 교육프로그램, 장비개발, 정보분석 등 유형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역량 개선과 인력, 물자자원 확보, 교육, 장비개발 등 표준화된 대테러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러한 측면에서 테러유형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테러조직을 비교하여 볼 때 유형별 대응조직과 체계는 기관 및 부서별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교육, 장비, 정보통합, 업무협조 및 조정,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대테러활동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조직이 각 기관별 구성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별 시행규칙에 따른 테러유형별 주요 담당기관을 살펴보면 대테러활동에 있어 각 조직이 기능별 테러담당 주무기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테러기능이 조직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기능적 통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공항·항만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같은 협의체 전담조직을 수시로 운영하여 기능적 통합과 더불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에서 실무위원회,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한 안전 상정과 의결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협조와 의결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대테러센터 내 근무하는 공개된 인원 32명 중 센터장1명, 정책관 1명, 파견 15명(국정원,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외교부 포함 파견 15명)을 제외한 15명으로 실질적인 대테러활동의 컨트롤 타워 및 각 기관별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업무에 비해 인원의 규모가 협소하고,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테러정보, 수신, 분석, 전파업무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테러훈련 및 테러이용수단,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유형별 예방, 대응에 관한 평가, 점검,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테러센터의 인력과 규모는 대테러활동 및 훈련에 대한 평가, 점검, 교육, 지도의 역할수행과 대테러업무를 전반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하기에 매우 제한되도록 구성되어있다는 것인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시기에 대테러센터 인력의 비공개성

과 국가정보원의 권한확대에 대한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현재 대테러센터의 자원과 조직으로는 법적인 토대 아래에서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센터의 인력 및 규모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센터 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직으로 각 테러유형별 전문평가 및 점검단 구성과 관리, 평가방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교육,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유형별 실무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하고, 공통된 항목에 대한 전문교육기관별 교육사항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공통교육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대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의 교육훈련, 인력배치, 교육훈련의 기준과 대테러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대테러종합훈련, 합동훈련 등 대테러훈련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자문, 점검, 평가,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의 검문검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16년 8월부터 철도검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항공보안을 기준으로 한 장비사용요령, 검문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의 경우 경찰신임교육을 통한 검문검색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정부청사, 국회, 검찰청 등 다양한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통합적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장비개발과 달리 대테러관련 기관들이 군사, 해양, 일반, 항공, 철도 등 각각의 테러유형과 특징에 따라 기관별 보안검색과 장비운용 등 공통적 보안활동에 대한 교육방법,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평가, 임명 등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미국의 연방법집행교육센터와 같은 통합적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기준을 마련하여 각 교육기관에서 통일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대테러예방 및 대책에 대한 대책에 있어 어느 기관에서 정하는, 어떤 과목을 통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표준화된 대테러활동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대테러 예방, 대응을 위한 대상의 지역적, 기능적 특성에 대한 공통교육 및 기준마련에 대한 연구와 통합기준 마련, 통합교육체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대테러활동은 국외, 국내, 군사, 항공, 해양의 대테러 기능을 전담하는 5개의 대책본부와 지원본부, 행정기관과 조직들이 각각의 테러사건에 대해

구성된다.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시행령 23조에 따라 테러대책본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지방경찰서장이 초동조치 지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후 대책본부가 편성되고 현장지휘본부가 결정되면 각 관계기관장에게 필요 자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테러사건에 있어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이후 현장의 모든 자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장지휘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지휘본부 지휘자의 역량차이(gap)가 대테러활동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테러사건 발생 후 구조대, 특공대, 소방 등 자원의 활용, 투입 시기, 통신체계 구성, 현장 테러정보 수집, 전파 및 보고방법, 의사결정 등 다양한 조직자원의 활용방법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장지휘본부장이 이러한 역할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평가, 교육 및 방향에 대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조직에서 파견된 인원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파견된 부대에게 있어 조직적 지휘관계와 테러현장의 지휘관계에 대한 중복적 지휘통제를 받게 되는 이중적 구조의 지휘통제관계가 구성되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지휘본부장의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현장지휘본부장의 교육과 인증, 그리고 현장지휘본부의 지휘통제 및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참모조직을 파견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지휘본부장의 교육과 인증의 방법으로는 외교, 군사, 일반, 항공, 해양 5개의 대책본부가 지정할 수 있는 현장지휘본부(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항공청, 외교공관 등)의 장을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관별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활동, 체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를 모의 또는 현장훈련을 통하여 평가,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현장지휘본부자의 역량을 표준화시켜 기본적인 대테러활동의 이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휘자의 대테러활동 역량을 보장하고, 이후 일정기간마다 갱신평가를 통하여 변화되는 테러에 대한 동향과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지휘본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기관은 대테러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검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가칭 ‘현장지휘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대테러조직간 협조사항, 테러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장비 및 기술지원, 통합상황실 내 장비, 기술지원, 상황분석 및 보고 등의 업무를 통해현장지휘본부에서 원활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센터와 즉각적인 정보공유 및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가정보원 (2016). 2015년 테러정세. 테러정보통합센터.
- 권태용 (2010). 한국의 대테러리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2009).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근 (2010). 한국의 대테러 전략.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규 (2006). 한국의 대테러리즘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신철 (2014). 한국의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태곤 (2007). 대테러 위기대응관리체제간의 유기적 협력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직간 관계의 상호작용수준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 윤지영 (2013). 미국 국토안보부 창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용 (2009). 효율적인 국가대테러조직체계의 구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5집.
- 장희동 (2013). 한국 대테러 정책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춘 (2007). 대테러관계법의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일 (2011). 한국의 대테러정책 발전방안 연구: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일 (2016). 우리나라 대테러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기타자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제14071호, 2016.3.3., 제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2016.5.31., 제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270호, 2016.06.28.,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493호, 2016.09.13.,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제42호, 2016.09.13., 일부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09호, 2016.11.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472호, 2016.08.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68호, 2016.10.2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100호, 2016.04.21.,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285호, 2016.06.17., 타법개정]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대통령령 제17494호, 2002.01.26., 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75호, 2016.08.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09.20.,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082호, 2014.05.28., 일부개정]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Lee, Chi Young*·Kim, Woo Jin**·Kwon, Hyuckbin***

To suggest improvement for Korea government related counter-terrorism, I research and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especially DHS and Korea CT 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 that Korea and U.S has similar type of organization to response terrorism in foreign area, transportation, custom & border, resilience&rescue, sea, chemistry, biology, and radioactivity, but different in comprehensive structure.

While DHS integrated all of counter-terrorism functions including training experts, developing related equipment, especially cooperating system among this place, Korean organizations of counter-terrorism separately merge in functioning work.

Therefore, we should reform and improve our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range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nd managing integration of information.

Key Words: Terror, Counter-terrorism, Terrorism, Organization of
Counter-terrorism, Counter-terrorism law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Researcher (The 1st Author)

** Texas State University Doctor of Science Researcher (The Corresponding Author)

*** Befor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Corresponding Author)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양 덕 열 · 양 영 모 · 이 창 후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양 덕 열*.양 영 모**.이 창 후***

[국문초록]

1996년부터 경호학과가 창립된 이래에 경호학회 관련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경호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호무도도 과거의 일반무도의 교육훈련이나 지도자자격(단증, 심판자격증, 지도사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호무도협회를 새로 신설하여 지도자 양성과 단증, 일반인들에 대한 경호무도의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호무도의 국가자격이 필요하다.

셋째, 국기원, 태권도원, 유도원 등과 같은 지도자가 연수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이 경호안전연수원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호학을 바탕으로 둔 경호무도를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할 수 있는 연수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넷째, 경호무도를 국가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방안으로는 경호무도 기본기술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평가 및 자격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타 무도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자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경호무도에서도 정립된 경호무도 기술체계에 대해 1년 이상의 수련 후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합격자에 대해 승단연한을 두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7년 이상 경호무도를 수련한 자에게 지도자 자격 연수 및 평가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하고, 지도자 교육 및 검증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호, 무도, 경호무도, 지도자, 지도자양성

* 안양대학교 경호학박사 외래교수(제1저자)

** 경북전문대학교 연구원(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외래교수(공동저자)

| 목 차 |
|-----------------------|
| I. 서 론 |
| II. 선행연구 검토 |
| III. 무도 지도자의 양성체계 |
| IV. 경호무도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
| V. 결 론 |

I. 서 론

최근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테러,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12월 독일 베를린 차량테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안보강경노선의 정책에 대한 긴장성과 김정은의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현 실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현실이다. 또한 동북아의 정세도 영토분쟁과 자국민보호, 경제 정책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2017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안보, 안전, 테러, 경호, 경비환경의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경호환경은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며, 예방, 대응, 복구 차원에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포괄적인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ICT,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융복합화 등 다양하고 새로운 학문적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호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경호산업의 변화를 도입시켜야 하며, 학문적으로 경호학의 발전과 변화가 필요하다.

경호학의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지도자의 양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과학적인 발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리적 경호환경 속에서 경호원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호원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교육시키는 경호무도의 지도자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논제로 본 연구를 하였다.

대학에서 경호의 전문적인 인력과 과학적 기법의 연구, 현장도입을 위해 1996년 경호학과가 시작되어 현재 약 100개 이상의 경호관련 학과가 개설, 경호경비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과 산업의 성장의 호황을 맞이하였다.

특히 초기 학과의 교과과목 및 연구의 대부분은 공경호의 기법과 원리, 원칙에 관한 특성에 관한 연구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그리고 경호상황에서 경호대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호원들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체계와 종합적 체력육성을 기반으로 한 경호무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경호원의 인성과 체력, 경호상황의 즉각적 대응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체력육성법, 경호무도, 일반무도 및 호신술 교과과목을 채택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호무도 교과과정을 통하여 태권도, 유도, 용무도의 일반무도와 동일하거나, 체력, 근력, 지구력 등 일반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체육과정을 교육하고 있어 경호무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경호무도의 특성에 관한 학문적 측면의 연구와 기술체계의 개발 및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체계의 발전 뿐 아니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무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태권도, 유도, 용무도 지도자의 양성체계와 자격검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지도자의 자격요건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절차를 비교하고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방안과 경호무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경호무도에 관한 선행연구

경호무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상철(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경호기법에 입각한 무도로서 무도기술 뿐 아니라 종합적 체력의 요소를 포함한 것을 경호무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후부터 경호무도 수련방법에 관한 연구(강영길, 송상욱, 2001; 박준석 2002; 김정만, 2002; 김태민, 2002; 박준석, 노승완, 2003; 강영길, 2003; 이영석, 2005; 서민학, 2005; 이상철, 김태복, 2007; 권태형, 2007; 조성진, 2009; 이강문, 이민형, 2009; 김종혁, 2009; 임승혁, 2009; 김재원, 2010; 진준욱, 2010; 박기범, 김태민, 2010; 이창백, 2011; 박태일, 2011; 마나, 2011; 김정학, 2011; 정성배, 2012; 정일홍, 2013; 신윤희, 2014; 김도영, 2015)와 경호무도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영석, 2001; 박준석, 2004; 김의영, 2003; 조용진, 2006; 정현국, 2007; 왕영청, 2009; 오세광, 2010; 이승형, 2010)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호무도 수련방법에는 일반무도인 태권도, 유도, 용무도, 합기도, 검도, 특공무술 등 다양한 무도의 기술과 수련방법을 경호무도의 특성에 맞추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경호무도의 기술적, 교육적 정립을 위한 연구가 많은 데 비해 이러한 기술체계를 정립, 보급할 수 있는 경호무도 지도자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양상을 보였다.

2. 지도자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신동성(1997)은 스포츠에서 코칭이란 선수가 운동에 참가하는데 관련된 지식이나 체력, 기술 및 전략, 태도, 철학 등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코치가 해야 할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코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팀에서 코치의 역할은 팀의 성공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주고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평소의 실력을 긴장상태인 시합 중에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줘야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코칭이란 '전문적이며 직업적인 코치와 선수 또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면을 더욱 성공적

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정지혜, 2000).

김도훈(2016)의 골프지도자의 인성코치행동이 신뢰선수와 선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코칭이란 지도자가 잠재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술과 기술을 지도하고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해 효과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합에서 우수한 경기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총체적 행위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수련자들의 수련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미완성의 인간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으로 인도하기 위한 자기 각성과 지도자로서의 동기유발 촉진을 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오장근, 2010).

지도자 교육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지도자(指導者)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 주는 것으로 정의되는 교육(教育)이 복합된 합성어라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4).

전문성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 방법 및 그러한 기술과 방법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역사적, 학술적 원리에 대한 강의를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준비를 요구하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꾸준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전문성은 교육의 핵심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김대희, 2013).

또한, 스포츠 지도자들은 학문적 소양, 즉 공식 교육과 훈련 및 공인된 자격증을 갖추고, 지도에 대한 자신만의 지도철학을 세워야 하며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직업 경험과 선수 경력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엄석주, 2010).

남광우(2016)의 유도 전문지도자 교육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도지도자 교육이 기초 수준의 교육내용과 여담형식의 배우기식적 교육,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설명 등으로 비효율적인 교육과 유단자들의 승단을 위한 변질된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육상, 수영, 사격, 태권도 등 33개 종목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의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김선희, 2009)의 결과와 경기지도자 연수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의창, 신승윤, 1997)의 결과와 유사했다.

조옥상과 전병관(2011)에 의하면 전문체육지도자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효과성은 검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체육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대부분의 전문체육지도자들이 학부시절 배웠던 교육내용과 다르지 않은 이론교육을 지도자 교육에서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인화, 김진희, 2010).

이종호와 은희관(2014)은 체육지도자의 지도역량 평가요인 탐색이라는 연구에서 체육지도자의 지도역량 요인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지도신념, 자기조절력,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4개의 대영역을 추출하여 지도자 역량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통합적 관점의 연구설계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환과 김혜경(2008)은 태권도 지도자의 유형을 크게 겨루기형, 품새형, 시범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맞는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교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임태희(2006)는 지도자의 자질을 프로그램, 지도법, 이론, 실기, 언어구사력, 사랑, 리더십, 예의, 노력, 이해심, 인내, 자신의 신념의 12개 요인으로 정의하고 이론과 실기, 사랑, 지도내용, 마음자세, 학부모 관리, 리더 역할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손천택(2012)은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법제개편과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개원에 따른 태권도지도자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고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서 지도자 양성과정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기원의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정이 현장의 요구나 기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곽정현(2005)에 의하면 주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과 현행 태권도지도자 양성과정을 각기 또는 비교 분석하여 양성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고 그에 따른 필요 과목들을 첨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태권도 지도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발·제안하기 못하고 있다고 한다(손천택 외 3명, 2009b).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들이 특별히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겨루기과정, 품새과정, 시범·공연과정 등과 같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도자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손천택, 2012).

II. 무도 지도자의 양성체계

1. 태권도

1) 기관 및 변천과정

(1)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는 1961년 9월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된 이래 그 동안 개별 관이 자체적으로 단증을 발급해오던 제도를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62년 11월 11일 태권도계 최초의 공식 승단심사가 국민회당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1963년 2월 대한체육회 가맹을 승인받았고 같은 해 10월 제44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1965년 8월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정되었다.

2016년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국내 도장만 9,642개이고 세계 태권도본부 국기원 등록 품·단 현황을 살펴보면 9,850,641명의 품·단자가 국내외에 있으며, 국내 품·단자만 4,790,466명으로 집계되었다¹⁾.

또한 ‘국기원(WTA) 국내외 태권도 교육 실태조사(15)’에 따르면 1급(67명), 2급(290명), 3급(2,598명)의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총 2,955명으로 집계되었다.

(2) 세계태권도연수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은 1983년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전문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키고자 설립되었다. 사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외국인·장애인 사범, 겨루기·품새 심판, 세계태권도한마당 국제심판 교육 등 분야별, 과정별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국기원, 2016).

이에 연수원은 ①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 ②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연수사업 ③ 태권도 관련 단체 위탁 연수사업 ④ 국내외 태권도 보급 및 교육사업 ⑤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온라인 연수사업 ⑥ 태권도 기술연구 및 교본, 지도자교재 편찬 사업 ⑦ 기타 태권도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²⁾ 세계태권도연수원의 태권도 사범 교육과목의 변천을 살펴보면 크게 1980년

1)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www.koreataekwondo.org, 2016년 9월 23일 검색).

2) 국기원 정관(2014년 10월 9일 개정).

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체육원리, 체력육성, 생체역학, 트레이닝원리, 체육심리의 과목들이 기초체력이론을 구성하고 있고 태권도사, 도장경영론, 심판론의 과목들이 태권도이론을 구성하고 있었다. 기본동작, 품새론, 겨루기론이 태권도실기를 구성하고 있었고 예의규범, 특강, 새마을운동, 의식개혁, 영어가 교양을 구성하고 있었다. 특강에서는 지도자의 자질이나 역할, 태권도의 현황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기타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개강식, 수료식과 같은 자격시험에 관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초체력이론영역이 사라지고 특강영역이 생겨났는데 국기원 현황의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태권도이론영역에서는 도장경영론이 제외되고 심판론이 경기규칙과 심사규정으로 나뉘어 구분되어있었다. 태권도실기에는 시범방법론이 추가되었고, 교양영역이 사라지고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 및 수료식을 포함한 기타영역이 생겼다

2000년대의 교육과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강영역에서는 지도자의 자개념과 직업가치관을 과목으로 두고 있다. 태권도이론영역에서는 태권도사와 태권도지도론, 도장경영론이 추가되었으며, 태권도실기의 경우 1990년대와 같다. 기타영역에서는 자격시험이 추가되었다.

(3) 국기원

1971년의 국내 태권도 인구는 대략 130만 명이었으며,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한 ‘국기 태권도’란 친필 휘호는 태권도가 국기로 공식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각관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도장이 필요했고, 마침내 1972년 강남구 역삼공원에 국기원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정정규, 2008).

국기원은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와 세계태권도연맹 발족을 주도함으로써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올바른 지도자 교육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3년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을 개원하여 미래 태권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 수련 가치를 측정하는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체계를 마련하였다(국기원, 2016).

국기원은 태권도 ① 기술 및 연구 개발 ②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③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④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⑤ 해외보급과 국제교류 사업 ⑥ 대회 및 행사 개최 사업 ⑦ 홍보 및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 ⑧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⑨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³⁾.

국기원은 1972년 중앙도장(국기원)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그 해 태권도지도자강습회(태권도사범연수)가 처음 국기원에서 열렸다. 1980년 2월 승품·단 심사 및 발급업무를 국기원이 위임받았으며 3월부터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업무를 받아 통합관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심사업무는 1984년 7월 세계태권도연맹으로 이관되어 발급하도록 되었고 이후 1988년 해외심사업무를 모두 국기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982년 9월에 국기원은 지도자 양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기원 산하 태권도지도자연수원(태권도아카데미)을 개설하였고, 1984년 1월 체육부가 국기원을 국가공인 태권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985년 9월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기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세계태권도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면서 태권도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했으며 1987년에는 「국기태권도교본」을 발간하였다.

1990년 2월 체육부가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1995년 9월에는 「태권도교본」을 발간되었고 2005년 9월 수정 및 증보되었다.

2006년 4월에는 국기태권도연구소가 개소되었으며 2006년 8월과 11월에는 태권도 역사·정신 및 태권도장 경영활성화모델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10년 6월에는 「국기원태권도연구」 제1권 1호가 발간되었으며 2012년까지 발간되고 있다. 2010년에는 태권도 기술 용어집이 발간, 2012년에는 태권도 기본교재가 발간되었다. 2015년에는 개도국 태권도 전문가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기원 산하 지도자 연수원은 1972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해 오던 사범 지도자 교육을 1976년 11월 1일부터 국기원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하였다.

국기원 교육원이 1982년에 발족되었고, 1983년 개원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이 설치되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을 위해 사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외국인·장애인 사범, 겨루기·품새 심판, 세계태권도한마당 국제심판 교육

3) 국기원 정관(2014년 10월 9일 개정).

등 분야별, 과정별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의식과 덕목을 배양시킴으로써 사회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시행을 통해 배출된 약 14만명의 지도자들은 태권도 후진 양성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정신의 실천을 통한 국가적,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국기원지도자연수원의 설립목적은 태권도를 범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전통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이상적인 인간으로 육성시킬 지도자를 배출하여 태권도의 저변확대는 물론 태권도 기술 및 동작을 보급 발전시키며 태권도인의 화합과 협력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기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80년 제28기부터이며 1983년 11월 29일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국가공인 ‘태권도지도자연수원’으로 승인을 받아 국가자격제도인 2급 경기지도자연수원(코치아카데미)으로 지정됨으로써 태권도지도자 교육기관으로 승격했다.

당시 코치아카데미는 한국체육대학에 위탁, 4개 종목을 총망라하여 교육하였으나 태권도 종목만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서 독립적으로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1990년 2월 24일 문화체육부가 지도자연수원을 또다시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종래의 사범 교육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병행 또는 통합해 실시하게 되었다.

1992년 3급 사범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개설했고 1996년에 2급 사범 지도자연수과정을 개설했다.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은 크게 일반교육과정(자체 연수교육), 정부 위탁 교육(스포츠체육 지도자), 대한태권도협회의 위탁교육으로 3가지 사업을 주로 전담하고 있다.

일반교육과정은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자격 과정으로 태권도 사범(국내외) 자격 연수과정(1~2급 : 3일 24시간, 3급 : 5일 40시간, 1~3급 외국인 : 5일 40시간)과 장애인 태권도 사범 자격 연수과정(5일 40시간),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연수과정(3일 24시간), 세계태권한마당 심판 자격 연수과정(3일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위탁 교육과정은 일선 태권도장의 운영과 태권도 사범들의 생활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태권도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 및 자격 과정으로 2015년 스포츠지도사로 자격증이 통합되어 생활체

육지도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과정으로, 경기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과정은 9일, 64시간의 교육을,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22일 176시간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유관단체 위탁 교육과정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 주최하는 품새 경기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품새 및 심판 교육 및 자격 과정으로 태권도 경기심판 자격 연수과정과 태권도 품새심판 자격 연수과정으로 구분되며, 3일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지도자 자격요건

국기원에서 발행한 ‘태권도 심사규정’에 따르면 태권도사범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국기원의 세계태권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사범 교육을 이수, 사범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먼저 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급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승급심사는 보통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의 기본인 서기(넓혀서기, 모아서기, 특수품서기), 방어(막기, 잡기), 공격(지르기, 치기, 찌르기, 차기, 꺾기, 넘기기), 특수품과 품새(태극1장~태극8장), 겨루기 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유급심사를 모두 마치면 승단심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품, 15세 이상의 경우 단이라는 명칭으로 유단자 품새(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중 필수품새와 지정품새, 겨루기, 격파와 이론과목(필답 :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경기, 경연, 구성요소 등 논술), 구술면접의 과목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4단의 경우 기본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 이론과목인 필답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품, 또는 단을 취득하면 더 높은 단으로 승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1단에서 2단은 1년 후 취득이 가능하고, 2단 취득 후 3단은 2년, 3단 취득 후 4단 심사를 보기 위해서는 3년으로 총 7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단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나이는 15세 이상이며,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4단 심사를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4단을 취득한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3급 사범지도자 연수를 받아 지도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수는 국기원에서 5일간 4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된다.

그 외에 2급 사범지도자자격은 6단 이상 3급 사범지도자자격을 취득한 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태권도 도장운영 및 지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후 3일 간 태권도의 원리, 철학, 기술, 태권도와 건강, 특강, 시범론, 품새 교육 등의 과목을 통해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1급 사범지도자자격은 8단 이상 2급 사범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2일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2. 유도

1) 기관 및 변천과정

한국의 유도는 초기 조선유도연맹과 조선연무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발전하여왔다. 조선유도회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유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는데, 1945년 10월 초대 이범석 회장을 추대하며 조선연무관에 모여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조선유도연맹을 출범시켰다. 창립 직후인 11월 26일에는 대한체육회에 가입했으며, 1947년 7월 조선유도연맹의 중앙도장을 개관하였고, 1948년 조선유도연맹에서 대한유도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연무관은 1932년 이경석 선생에 의해 개관되었으며, 해방 이후인 1945년 9월 조선연무관(朝鮮研武館)에서 고도관조선지부를 인수하여 그 해 10월에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으로 개칭, 유도인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1950년 9월 대한유도연맹과 조선연무관의 통합으로 ①유도 보급, 경기자 양성, ②유도단 부여 및 승단에 관한 심의 및 총괄, ③기본방침 심의결정을 담당하는 대한유도회를 발족하였다.

이후 대한유도회는 1953년 6월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이제황(李濟晃)이 2년제 초급대학과정인 대한유도학교를 개설하여 전문 유도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대한유도학교는 1964년 1월에는 재단법인 대한유도학교에서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인가를 받아 학교법인 변경과 동시에 사실상 대한유도회와 분리되었으며, 1971년 대학학력인정학교로 지정, 1988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1990년 교명을 대한체육과학대학으로 변경, 19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후 1993년 교명을 용인대학교로 변경하여 유도 뿐 아니라 태권도, 용무도 등 전문 무도지도자 양성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1956년 5월 국제유도연맹 및 아시아유도연맹에 가입 및 1958년 8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최초로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1972년 5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과 함께 한국유도중앙도장 착공을 개시, 1975년 7월 12일 완공하여 한국유도회관으로 한국 최초의 유도인에 의한 중앙도장을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인 또한 1956년 2월 문교부 「귀속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문교부 주관으로 유도 5단 이상의 전국 고단자들을 초청. 그 회동회의에서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의 발족하여 한국유도선수 양성과 유도보급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한국유도중앙도장 착공에는 재단법인 대한유도원에서 공사를 주관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중앙도장 매각 후 사무실을 체육회관으로 이전했던 1968년부터 시작된 유도원과 유도회의 문제, 완공된 한국유도회관의 유지자금 및 인수문제로 인해 대한유도회와 서로 다른 방향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 8월 대한유도회와 대한유도원을 통합한 사단법인 대한유도회가 창립되어 지속적인 유도발전 및 지도자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도자 자격요건

유도지도자(사범)는 구별된 정의는 없으나 유도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4단 이상, 1급 지도사범자격증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급자 과정을 통해 9급에서 1급까지 각 급에 따라 9~8급은 흰띠, 7급 노란띠, 6급 주황띠, 5급 초록띠, 4급 하늘색 띠, 3급 파랑띠, 2급 보라띠, 1급 밤색띠로 구분하고 있다.

매 월 또는 격월로 낙법, 매치기, 굳히기와 같은 기술의 정확성, 심사 급의 기술 순서, 성실한 태도에 대한 승급심사를 통하여 승단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승단심사는 경기, 본, 학술로 나누어 평가하며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년단을 포함한 2단 이하의 경우 매치기본, 3·4단의 경우 매치기본과 굳히기본, 5·6단의 경우 부드러운본, 되치기본, 호신의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유도 수련자 중 만13세 이하에게는 소년단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년초단과 소년2단을 취득한 자에게는 단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연령(초단 14세, 2단 16세) 도달 시 자동적으로 단을 취득할 수 있으며, 승단 시 단별 일정 수련연한이 경과하여야 승단을 신청할 수 있다.

4단이 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며, 3단부터는 시도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를 참석하여 2일간 16시간의 강습과 평가를 통해 심판 및 지도자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심판 및 지도자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용무도

1) 기관

1995년 2월 24일 미국 국제 무도 학교에서 시범과 기술교류를 계기로 한국적인 무도의 개발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7년 10월 31일 제 1회 전통무예 시연회를 사단법인 대한 무도학회와 용인대학교 국제 스포츠과학연구원 무도연구소의 주최로 용인대학교에서 진행했다(박기동, 윤대중, 2009).

당시 용인대학교 내 합기도 시범단 10명이 미국 버클리 대학을 방문하여 ‘한기도’로 시범을 시작한 것이 용무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합기도는 여러 유파로 나뉘어져 정통성문제에 대한 많은 혼란이 산재하고 있었다.

1998년 10월 15일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적인 무도인 용무도의 개발 필요성 및 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뒤이어 11월 20일 무도대학장을 본부장으로 한기도 개발본부를 설치하고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체계화 작업에 들어갔다.

한기도 개발 본부는 한성철 팀장과 6명의 팀원을 둔 기술 개발팀과 김의환 팀장과 3명의 팀원을 둔 학술 팀을 두고 본격적인 학술 연구를 시작하였고 연구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 기술과 학술적인 부분들이 공동으로 연구되었다.

이후 1999년 4월 20일 제 1차 학술세미나에서 ‘한기도’라는 이름이 나타났고 동년 11월에는 ‘한기도’에서 ‘국기도’, 이듬해 4월에는 ‘국기도’에서 ‘국무도’로, 동년 6월에는 ‘국무도’에서 ‘용무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1년 1월 용무도협회가 설립된다(박기동, 윤대중, 2009).

용무도는 현대무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각 무도스포츠의 실전적 기술제한과 상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1995년부터 5년간의 준비 및 기술개발을 통해 종합무술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용무도협회가 창립되었고, 2002년 세계 용무도 협회가 창립되었

으며, 현재에는 16개 시·도 지부를 설립하여 용무도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2007년을 용무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용무도연맹을 창설하고,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각국의 용무도 지도자들 초청교육 등 용무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대한용무도협회가 설립된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후반기 용무도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2009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되면서 2010년 법무부 교정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채용 인정단체로 등록되고 2011년 경찰채용 가산점 인정단체로 등록되면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2) 지도자 자격요건

용무도의 수련체계는 예법과 기본동작, 대인기술, 응용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기본동작에는 서기, 걷기, 겨눔, 낙법 등 기초기술을 수련하고, 대인기술에는 손기술(치기, 지르기, 찌르기, 막기 등), 발기술(앞차기, 돌려차기, 찍어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무릎치기 등), 몸기술(메치기, 굳히기, 꺾기 등)로 구분하고 있다.

응용기술의 경우 앞서 수련한 기본동작과 기술, 대인기술에 대한 연결기술과 되치기를 통한 제압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수련체계는 수련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며, 초급과정의 경우 기초기술, 대인기술, 호신형 기술에 대하여 기초기술인 차기, 치기, 꺾기, 메치기 등을 수련한다.

중급과정의 경우 초급과정의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과 연결기술로 이루어져 기초기술, 대인기술, 연결기술, 제압형 기술에 대한 수련을 실시하고, 고급과정은 중급과정의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시 제압하는 기술, 공격 전 선제공격하는 기술로 이루어져 기초기술, 대인기술, 연결기술, 되치기기술에 대한 수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쳐 4단을 취득하면 지도자 및 사범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지도자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자격을 받거나, 4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사범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4단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2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1단에서 승단 시 수련연한이 경과되어야만 승단심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1단에서 2단의 1년, 2단에서

3단의 2년, 3단에서 4단의 3년을 합한 총 7년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실기평가기준으로는 2단 이하 기본기술과 호신형, 제압형 과목을 평가하고, 3단, 4단의 경우 되치기와 연결기술, 5단, 6단의 경우 무기술, 진검, 형에 대한 실기과목을 평가받아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며, 4단을 취득한 후에는 지도자 및 심판 강습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강습회는 정기, 후기로 연 4회 개최되어 1회당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강습회를 마친 후에는 수료증서를 받게 되며, 수료증서의 수료허가번호를 승단심사 시 기재하여야 심판 및 승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4단 이상의 자에게는 자격증서를 제 공하나, 용무도지도자과정 이수자 또한 무시험검정으로 지도자 및 심판자격증을 교 부하도록 되어있다.

예외적으로는 용무도전공자에게 한하여 3년부터 무시험검정으로 지도자 및 심판 자격을 교부하고 있다.

용무도의 지도자 과정은 2011년도 전반기부터 현 2016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오고 있다. 용무도 지도자 과정에서의 교재는 용무도호신술, 용무도, 용무도 대회 규정집이며, 평가내용은 출석과 실기테스트, 이론테스트로 구분되어 있다. 실기 테스트에서는 용무도 기술 및 심판수신호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며 이론테스트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시험한다.

용무도 지도자 과정은 2011년부터 계속되어왔으나, 2012년 6월 8일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가 개최된 이후 2013년 전반기부터는 지도자 과정이 15주 과정에서 8주 과정으로 변경되었다. 강의의 내용에서는 용무도 낙법이 추가되었으며, 경기용품과 심판아대 준비물이 없어지고 심판복장의 준비물이 추가되었다. 또한, 심판규정집뿐만 아니라 경기규정집을 가지고 용무도 대련 및 경기소개의 강의를 가르치고 있다. 공통적으로 수업도우미는 용인대학교 용무도 전공학생이 배치되어 지도자 과정을 돕고 있다.

III.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1.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과정

먼저 각 무도기관의 초기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태권도는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 창립과 함께 1963년 2월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 동년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유도·의 경우 해방이후 조선유도연맹의 출범 한달 후인 1945년 11월 대한유도회 가맹단체로, 용무도 또한 2001년 대한용무도협회 출범이후 2007년부터 대한체육회 가맹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여 2015년 준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각 무도의 초기과정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가맹경기단체의 인증을 통해 국민생활체육으로서의 지원·육성사업 및 홍보와 보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련생 및 회원들에게 무도수련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나아가 무도를 확산, 운영하기 위한 수련생 모집과 체계구축을 위해 기초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태권도는 협회출범 이후 지도자 양성 및 기술체계 개발을 위한 중앙도장 설립을 추진하여 1972년 국기원을 설립, 동년부터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하였으며, 유도의 경우 조선유도연맹 출범 후 2년만인 1947년 중앙도장을 개관, 용무도는 기술체계 개발 시 지도자과정을 개설한 후 2002년 대한용무도협회 출범과 함께 용무도 지도자 과정을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증가하는 수련생에 대한 지도과정을 개설, 정립된 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기술체계의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도의 체계에 있어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무도 지도자교육체계 개발과 이를 연구, 개발, 정립할 수 있는 중앙도장(또는 연수원)의 개관을 통해 지도자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도의 경우 협회간의 불화로 인해 중앙도장의 폐쇄 이후 다시금 중앙도장을 설립하는 노력을 보여준 바, 그만큼 무도 지도자의 양성과 기술체계 개발에 있어 교육원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각 무도 초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은 무도의 신뢰성 확보와 홍보, 또한 무도의 전문적 교육과 기술체계 개발을 위한 연수원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무도의 중기에는 무도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연맹 설립이나 가입, 세계대회 개

최 또는 참가를 통해 얻은 성과로 무도의 국제적 홍보와 무도에 대한 국민적인식 함양 등 효과적인 무도의 보급과 전파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시·도·지역별 지부 설립을 통해 제도적인 체계 하에서 수련생 모집과, 지도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기 이후에는 단순한 생활체육으로서가 아닌 자격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및 특수·시설기관의 관련분야 인사채용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장 뿐 아니라 업무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문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각 무도의 기술체계에 대한 정립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무도별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해 볼 때 무도의 기술체계 정립 이후 초기에는 무도수련에 대한 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무도를 수련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수련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체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경호산업에 적용시켜 볼 때 경호무도의 기술체계 정립 이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홍보,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민간경비, 청원경찰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경호무도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경호무도를 현장에 홍보·보급·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초기의 목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경호무도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중앙도장의 역할을 하는 경호무도 연수원을 설립하여 일선현장의 경호무도 수련생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과 단증발급, 기술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정립된 교본을 발간하고, 다양한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목과 심화과목을 편성하여 경호무도 기술체계에 대한 유형별 세분화, 전문화, 통합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경호무도 지도자의 자격기준

<표 1> 무도 지도자 자격요건 비교

| 구분 | 태권도 | 유도 | 용무도 |
|--------|-----------------------|-----------|----------------------|
| 자격검증 | 4단 | 4단 | 4단 |
| 수련기간 | 7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이상 |
| 평가내용 |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이론 | 경기, 본, 학술 | 기본기술, 본, 형, 연결기술(응용) |
| 전문 교육원 | ○ | × | × |
| 사범연수 | ○ | ○ | ○ |
| 연령제한 | 18세 | 22세 | 21세 |

앞서 살펴본 5개의 무도 지도자 양성체계를 비교해보면 먼저 자격검증의 경우 4단 이상의 단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수련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인 경우 4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각 무도별 지도자연수과정을 지도자과정, 강습회, 사범연수라는 각각의 명칭에 따라 지도자 자격검증과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내용으로는 공통적으로 기본동작기술과 이를 활용한 동작으로 구성된 형(型)과 응용기술이 있었으며, 4단 자격을 얻기 위한 연령제한의 차이와 태권도, 유도, 검도는 무도의 학문적 배경과 이론에 대한시험을 통해 4단을 인증한다는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태권도의 경우에는 1982년과 1983년 국기원 교육원과 지도자연수원을 통해 지도자 인증과 위탁교육, 기술체계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합기도의 경우 2013년 5월 대한합기도 중앙연수원의 개원을 통해 사범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검도의 경우 2011년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개원을 통해 지도자 강습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도, 용무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심판, 지도자 강습회의 수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사범자격과 승단 상 교육 미 이수 시 승단자격, 사범자격을 정지하는 제한을 둬으로써 지속적으로 무도 지도자로서의 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각 무도의 지도자 양성체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동작과 이를 응용한 기술체계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기술체계가 경기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교육체제와 심사방법, 경기규칙, 기술 및 장비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태권도, 유도, 검도는 지도자를 평가함에 있어 이론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경기, 겨루기를 통한 숙달정도 및 기술체제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때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호상황 시 경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위해자의 공격을 무력화, 또는 상쇄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경호무도의 기술체제를 최초로 제시한 이상철(1997)은 경호무도의 수련방향은 손기술, 발기술, 몸기술 등 모든 술기의 체득은 물론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의 복합적인 체력단련과 판단력, 침착성, 감각 등의 정신전력 향상 등의 종합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는 기술, 체력, 정신적의 3가지 측면에서 경호무도의 수련방향과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일반무도의 경호무도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반무도가 경호무도에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학문적 근거로서 제시되었을 뿐 경호무도의 자체적인 기술체제를 정립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일반무도를 경호무도에 적용한 연구와 경호무도 교육과정에서 일반무도, 체력에 관한 수련은 임승혁(2009)의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경호무도의 독자적인 체계가 정립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앞 장에서 비교한 일반무도 지도자 양성체제를 토대로 한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각 무도가 기본동작을 기초로 하여 기술의 응용과 형(型), 또는 본(本)의 형태를 구체화, 전문화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도자의 자격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경호무도의 기본기술체제에 대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무도가 1995년부터 5년 간 이러한 기본동작과 기술체제 개발을 위하여 연구와 준비를 시작했다는 예를 보더라도, 무도의 발전과 보급, 인력의 양성의 기초가 기본기술체제의 정립이라는 기반 하 시행하여왔다는 점에서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호무도 기본기술체제의 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력 향상보다는 경호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숙련도와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특정 체력의 요소에

대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기술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본기술체계의 정립 이후에는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경호무도 수련생의 평가체계 및 자격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각 무도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에 대해 각 협회에서 규정한 심사규정, 규칙을 두어 지도자에 대한 평가와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련기간과 등급에 따라 단계적 평가를 통해 기본기술에 대한 숙련도 향상과 이해, 응용동작과 기술을 구현 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본기술체계에 대한 기술의 숙달정도와 경호체력의 요소에 대한 경호무도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과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자격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제도에 대해 가장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 배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사’라는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기시험으로 구분, 연속동작의 총 15수를 평가하고 있으나, 기술체계의 미흡성,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과 응시자격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호무도 자격제도 구축에 있어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전문성과 기술의 숙달기간을 고려, 타 무도에서 선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립된 경호무도 기술체계에 대해 1년 이상의 수련 후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합격자에 대해 승단 연한을 두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7년 이상 경호무도를 수련한 자에게 지도자 자격 연수 및 평가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경호무도 수련생에 대한 지도자 인증과정인데, 이는 경호현장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유도, 용무도와 같은 강습회와 사범연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호무도 지도자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경호무도 지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호무도는 지역단위의 시·도 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일반 도장과는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강습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호무도는 독립적인 연수원 또는 대학기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에 대한 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연수교육에는 지도자 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포함하

고, 경호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에서 교육하고 있는 경호학개론, 경비업법의 이론과목과 경호무도의 기본, 응용기술 및 주어진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기법의 숙련도를 평가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평가에 합격한 인원에 한하여 자격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1996년부터 경호학과가 창립된 이래에 경호학회 관련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경호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현대에 이르러 학문적 융합화와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 4차 혁명, 인공지능, 미래사회의 시대에 맞추어 경호분야의 과감한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경호무도도 과거의 일반무도의 교육훈련이나 지도자자격(단증, 심판자격증, 지도사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자격증 등)에 대한 경호무도의 단점과 지도사 자격 관련에 대한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한다.

크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 태권도원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경호무도의 도입방안을 법적으로 경호무도관련 법령을 독립적으로 따로 만들 필요가 시대적으로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서 각 대한체육회 산하, 각 협회(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용무도협회)의 기능과 예산을 경호무도도 대한체육회의 산하에 경호무도협회를 새로 신설하여 지도자 양성과 단증, 일반인들에 대한 경호무도의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경호 관련 분야의 난립되어있는 임의단체, 협회, 연맹, 연합회 등과 같은 부분을 정부부처에서 법령으로 제도화하여 다른 공인화된 대한체육회 정식단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면서 목표이다.

경호학의 여러 논문 중에서도 경호무도에 관련된 논문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자는 경호무도학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경호관련학의 세부영역으로서 경호무도학이 구축되는데 의의가 있다.

경호무도는 일반무도와 달리 경호상황 즉, 우발상황, VIP(피경호인)에 대한 안전한 경호업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호의 원칙과 경호기법, 경호의 유형

별 대처방안, 개인·팀별 상황훈련이 일반무도와는 목적과 목표가 전혀 다르므로, 경호무도의 독창성을 가지고 경호무도기법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호장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끔 대통령 경호실, 경찰청, 군,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국가중요시설(국회의 경호방호직, 법원의 법원경비대 등)의 청원경찰의 직종의 분야특성에 맞게 경호장비의 규격화와 사용메뉴얼, 인증제도의 마련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호무도의 국가자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범자격증 및 지도자자격증(태권도, 유도, 용무도 등)과 같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의 경험자로서의 기준과 있는 것과 같이 경호무도도 경호현장에서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

가칭 경비지도사와 같이 경호무도지도자 자격증과 같은 것을 국가자격으로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도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국기원, 태권도원, 유도원 등과 같은 지도자가 연수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이 경호안전연수원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호학을 바탕을 둔 경호무도를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할 수 있는 연수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경호무도를 국가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국에 있는 경호관련 교수들 및 박사들, 대통령 경호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전문직 관련 실무자들과 같이 경호학의 분야별 연구가 필요하겠다. 구체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실습, 기타의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과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호무도사, 경호무도철학, 경호무도윤리, 경호무도사회학, 경호무도심리학, 경호무도사례연구, 경호무도연구법, 경호무도실습, 비교무도, 경호무도지도방법론, 경호무도육성법, 경호무도위기대처법 등이 있겠다.

경호무도의 수련복과 경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호요원들의 복장이 난립되어있는 것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군은 군복이 있고 경찰은 경찰복이 있지만, 경호종사자들의 복장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태권도는 태권도 도복이 있고, 유도는 유도 도복이 있고, 용무도는 용무도 도복이 있다. 체육으로 말하면 야구는 야구복, 축구는 축구복이 있다. 따라서 경호원들에 대한 경호안전복과 경호무도도복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가칭 경호안전복은 위해현상이나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흉기, 생·화학물질, 화재에 대한

보호안전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가칭 경호무도 도복도 경호상황목적 매뉴얼에 맞춰서 실용적이고 편리한 도복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태권도 도복은 잡기, 낙법치기에 불편하고 안정성이 미비하다. 유도도복은 민첩성이라든지 기동성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 새로운 경호무도도복은 개량된 최첨단 신소재 섬유를 이용한 도복을 만들어 보급화하고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민간·특수경비원들이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 경비원 복장이 서로 상이하다. 이에 표본·표준화된 분장으로써 새롭게 한국형 경호안전복, 경호무도도복이 현실성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경호무도 지도자의 양성방안으로는 경호무도 기본기술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호무도 기본기술체계의 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력 향상보다는 경호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숙련도와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특정 체력의 요소에 대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기술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타 무도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자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경호무도에서도 정립된 경호무도 기술체계에 대해 1년 이상의 수련 후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합격자에 대해 승단연한을 두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7년 이상 경호무도를 수련한 자에게 지도자 자격 연수 및 평가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하고, 지도자 교육 및 검증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길 (2003). 우발상황시 경호무도의 적용 방법.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길, 송상욱 (2001). 경호활동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경호무도 수련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2(3).
- 곽정현 (2005).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태권도의 학문적 방향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4(5), 69-78.
- 권태형 (2007). 근접경호 위해분석을 통한 경호무도의 활용 방안.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희 (2013). 댄스스포츠 지도자의 전문성이 지도자 신뢰, 동일시 및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 (2015). 한국 킥복싱기술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훈 (2016). 골프지도자의 인성코칭행동이 신뢰와 선수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9). 학교 운동부 코치의 코치교육 경험 및 인식. 코칭능력개발지, 11(4), pp.39-63.
- 김의영 (2005).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수업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4호.
- 김재원 (2010).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품새 기술의 활용방안.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만 (2002). 경호무도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학 (2011). 태권도 수련을 통한 경호무도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혁 (2009). 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의 활성화 방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민 (2002). 우발상황시 근접경호와 경호무도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3권 제1호.
- 대한태권도협회 (1975). 태권도 교본. 대한태권도협회 출판부.
- 마나 (2011). 중국무술 술기의 경호무도적용.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동, 윤대중 (2009). 용무도의 창립 배경과 개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1).
- 박기범, 김태민 (2010). 한국합기도기술의경호무도적용. 대한무도학회지, 12권 3호.
- 박준석 (2002). 경호무도의 특성과 수련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3권 제5호.

- 박준석 (2004). 경호 관련 학과의 경호무도 교육발전 방안. 체육과학연구논총, 제13집 제2호.
- 박준석, 강영길 (2003). 우발상황시 경호무도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호.
- 박준석, 김정만 (2001). 경호무도의 접근 방법에 관한 고찰. 무도연구소지, 제12권 제1호.
- 박준석, 노승환 (2003). 경호무도 구성원리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2권 제1호.
- 박태일 (2011). 특공무술의 경호우발상황시 적용 방법.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학 (2005). 경호무도로서의 태권도 수련기법의적용.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천택 (2012).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법제 개편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12 한국 스포츠과학자 통합 학술대회, 한국체육학회.
- 손천택, 전정우, 양대승, 임태희(2009). 국기원 연수원 태권도지도자 양성제도 개선. 국기원 연수원 지도자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제.
- 신동성 (1997). 코칭론Ⅱ. 서울: 동원사.
- 신윤희 (2013). 합기도 술기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석주 (2010). 댄스스포츠 지도자 전문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이해.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광 (2010). 경호무도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장근 (2010).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형, 이강문 (2009). 경호 관련 학과의 경호무도교육 발전방안. 대한무도학회지, 11권 1호.
- 이상철 (1997).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무도연구소지, 8(1).
- 이상철, 김태복 (2007). 위기대응을 위한 경호무도의 활용 방법. 용인대학교 논문집. 제25집.
- 이승형 (2010). 경호무도 교육훈련시스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2001). 경호무도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2005). 경호무도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제23집.
- 이인화, 김진희 (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코칭능력개발지, 12(3), pp.47-56.
- 이종호, 은희관 (2014). 체육지도자의 지도역량 평가요인 탐색. 코칭능력개발지, 16(1), pp.27-35.
- 이창백 (2011). 경호무도로서 합기도 기술의 적용과 실제.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혁 (2009). 일반무도 특성분석에 의한 경호무도 발전과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태희 (2006). 태권도 사범의 자질 요인 중요도 탐색. 체육과학연구논총, 17(4).
- 정성배 (2012). 경호업무 우발상황시 일반무도 적용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홍 (2013).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2호.
- 정재환, 김혜경 (2008). 태권도장 지도자의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6(4), pp241-254.
- 정지혜 (2000). 한국 프로농구 감독의 코칭지식 개념적 모형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국 (2007).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 경호무도 수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진 (2009). 경호무도로서 유도기술의 활용 방안.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진 (2006). 경호무도의 교육 실태 및 발전방안.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상, 전병관 (2011). 한국과 미국의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한 전문코치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0(6), pp.857-867.
- 진준욱 (2010). 경호무도로서 유도의 활용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석 (2003). 경호무도수업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논문집.
- 최의창, 신승윤 (1997). 경기지도자 연수교육과정 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논총, 8(1), pp.1-17.

【Abstract】

Establishing a system for training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Yang, Duk Yeol*·Yang, Young Mo**·Lee, Chang Hoo***

Since 1996, establishing a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in Korea, although it has studied about security martial arts, however, there is no study about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in this area. To support developing academic subject in the place, therefore, I research through literature study on establishing a system for training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should build a security martial arts association for training leader, issuing licence of security martial arts, promoting it to establish a system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Also, the licence includes work experience over 7 years as other martial arts certification.

In addition, like kukkiwon, taekwondowon, judowon, we need to educate morality and personality in a work place for them by building training institute be called “security service won”.

Forth, after these process, teaching material made by field experts and professors has to disseminate for all security guard.

In this process, it should be fulfilled to applying characteristics of security martial arts, developing basic skills, and developed evaluating system of the leader.

* Anyang University Ph.D of Security Instructor (The 1st Author)

** Kyungbuk University Researcher (The Corresponding Author)

*** SungKyunKwan University Ph.D of Philosophy Instructor (The Corresponding Author)

Key Words: Security, Martial arts, Security Martial arts, Leader, Training leader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 희 영 · 손 영 각 · 조 민 희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 회 영*·손 영 각*·조 민 희***

[국문초록]

현대사회는 삶의 질 및 문화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 생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및 재산보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안전의식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경호경비가 그 수요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된 민간경호경비는 법적근거인 「경비업법」을 바탕으로 생활안전과 재산보호 등의 역할에 힘쓰고 경비대상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경호경비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경호경비원은 경호경비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근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장하였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원 장비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판단 하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원의 신입·직무교육의 장비사용법 시간과 교육 빈도수를 강화하여 경호경비 장비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호경비에서는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 사용기준, 장비교육, 검사기준

* 용인대학교 대학원(제1저자)

** 용인대학교 대학원(교신저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공동저자)

| 목 차 |
|--|
| I. 서론 II. 경호경비 장비사용 제도현황 III. 민간·공경호경비 장비사용제도의 문제점 비교분석 IV.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 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

I. 서 론

오늘날 경제성장으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범죄의 양상은 다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상태에서는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루지만,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이 가능해지면 살인·강도·강간 등의 지능적이고 흉포화 된 강력범죄가 증가한다. 또한 경찰청에 따른 우리나라의 범죄유형별 검거건수 추이(2010년-2014년)에서 절도범죄는 2010년 145,966건에서 2014년 119,467건으로 감소한 데에 반해 강력범죄는 2010년 22,790건에서 2014년 23,89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이버경찰청, 2016).

민간경호경비원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예방 및 제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간경호경비 현장에서는 단순한 상대밀기 등 경미한 폭력시비 상황부터 흥기를 휘두르는 극렬한 공격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상황 발생은 민간경호경비원 자신과 경비대상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간경호경비에서 범인 제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경호경비 장비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집단민원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 시 민간경호경비원의 경호경비 장비사용은 상당히 제한된다. 경호경비 장비사용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호경비 장비의 남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효용성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비책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을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남용은 엄격히 가중처벌 하되 정당한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민간경호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관한 관련법령은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본조신설 2013.6.7.)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경호경비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법률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5.12.30. 타법개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민간경호경비에서는 경호경비 장비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사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경호경비원들이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용 하더라도 그 법적근거·사용요건·사용기준·관리 시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서 규정한 범위인 사용한계를 벗어나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된 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채인길, 2014).

이와 같이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민간경호경비원의 장비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경호경비 목적달성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 마련과 장비의 교육·안전검사, 첨단경호경비 장비도입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 및 목적이 있다.

II. 경호경비 장비사용 제도현황

1.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 제도

민간경호경비 업무영역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가운데 경호경비 장비는 그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민간경호경비원이 경호경비 장비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장비의 휴대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알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비업법」의 장비사용에 관한 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비업법의 장비사용에 관한 규정 연혁

| 시행일 | 경비업법 규정 내용 |
|----------|--|
| 1977.4.1 | <p>용역경비업법[법률 제2946호, 1976.12.31 제정]</p> <p>④ 경비원은 근무 중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도록 함.</p> |
| 2001.4.7 | <p>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2001.4.7 전부개정]</p> <p>◇ 주요골자</p> <p>마.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대여 받은 무기의 관리책임은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이 지도록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시설주는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8항).</p> |
| 2001.7.8 | <p>바.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경비구역이탈금지의무와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법 제15조).</p> <p>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한편, 경비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법 제28조 및 제29조).</p> <p>아.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무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안전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p> |
| 2013.6.7 | <p>경비업법[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p> <p>◇ 주요내용</p> |
| 2014.6.8 | <p>차.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출동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p> |

다. 경비원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 자료: 용역경비업법, 경비업법 참조

1976년 제정된 용역경비업법[법률 제2946호, 1976.12.31. 제정]에서는 단순히 경비 업무 시 경비원은 근무 중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도록 함을 명시하였으며, 2001년 기계경비업무의 도입으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관리 하 무기를 대여하는 기부채납 형태의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SJM사태, 유성기업사태 등 노조 및 불법집거 현장에서 용역경비업체들의 무분별한 장비의 사용이 문제가 되자 [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을 통해 본래 민간경호경비원 장비의 휴대기준이 안전행정부령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장구 등)에 명시되었던 것을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본조신설 2013.6.7.)에 제정하여 경비원의 장비를 규정하고, 전과가 있는 경비원 채용금지 기간을 연장하며, 규정된 장비 이외에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비원에게는 가중처벌을 부여하는 등 장비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1) 장비사용요건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개별적 수권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제4항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사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경비원 휴대장비의 사용요건

| 구분 | 사용요건 |
|------------|--|
| 민간 경호경비 | 「경비업법」 제16조2(경비원의 장비 등)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 자료: 경비업법 참조

(2) 장비사용기준 및 한계

민간경호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사용하는 민간경호경비 장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제1항(전문개정 2014.6.5.)에서는 경비원이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표 3> 경비원 휴대장비의 사용기준

| 구분 | 사용기준(경찰봉, 호신용 경봉기준) |
|------------|---|
| 민간 경호경비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①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

※ 자료: 경비업법 시행규칙 참조

이와 같은 법적기준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 장비 | 장비기준 |
|---------|---|
| 1. 경적 |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
| 2. 단봉 |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
| 3. 분사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
| 4. 안전방패 |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 5. 무전기 |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 |
| 6. 안전모 |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 7. 방검복 |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 자료: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5] 참조

2) 장비사용법 교육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서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경비원의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 등)를 통해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24시간) 중 “장비사용법”에 대한 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업자에 의해 직무교육(월 4시간)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5> 일반경비원의 장비사용법 교육

| 구분 | 일반경비원 교육 |
|------|---|
| 내용 | <p>「경비업법」 제13조(경비업의 교육 등)</p> <p>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p> <p>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신입교육 | <p>「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 등)</p> <p>①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p> <p>: 신입경비원 실무교육 2시간(장비사용법)</p> |
| 직무교육 | <p>「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p> <p>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p> <p>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p> <p>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p> |

※ 자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참조

3) 장비사용 허가 및 안전검사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경비업의 허가과 함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에 대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6> 장비허가 및 안전검사

| 구분 | 일반경비원 교육 |
|----|--|
| 내용 |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
|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허가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자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참조

또한 동 규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초 허가 이후에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사항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표 7>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업무별 | 시설 등 기준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
| 시설경비업무 |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호송경비업무 |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신변보호업무 |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 | | | |
|--------|--|-----------------------------|--|--|
| 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 육할 수 있는 교육 장·관제시설 |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 신장치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 봉, 분사기 |
| |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이상을 동시에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 봉, 분사기 |

※ 자료: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3] 참조

2. 공경호경비 장비사용 제도

1) 경찰의 장비사용에 관한 규정

국가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내에서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 예방 및 방지를 할 수 있다. 즉, 국가경찰은 경찰장비 사용을 통해 경찰권 행사의 대상인 범죄자의 체포 및 진압에 있어서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자신에게도 안전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장비의 사용은 더욱 필요하다.

(1)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국가경찰의 장비사용요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에서 나타나는데, 제2항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장비사용요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표 8>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 구분 | 사용요건 |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
|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 |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 |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0.] |
| 경찰, 청원경찰 |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
|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 |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 |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
| |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전문개정 2014.5.20.] |
| |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 |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 |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의 발생 억제 [전문개정 2014.5.20.] |

※ 자료: 경찰관직무집행법 참조

(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및 한계

국가경찰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복제)에서 휴대 장구(분사기,

경찰봉 등) 및 무기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장비사용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표 9> 경찰장구의 사용기준 및 한계

| 구분 | 사용기준 |
|------|--|
| 경찰 | <p>「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p> <p>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p> <p>①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
| 청원경찰 | <p>「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p> <p>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p> <p>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충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자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표 10>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 장비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
|--------------|---|
|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
|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
| 3. 분사기·최루탄 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및 최루탄 |
|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

※ 자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2) 장비의 교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 중 대표적으로 경찰장구인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안전교육 기준과 경찰장비사용기관 또는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 1(경찰장비사용기관에서의 교육)

| 경찰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
|-----------|-----------------------|--------------------------|---------------------------|-----------------------|
| 경찰봉·호신용경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외근·기동대요원은 반기 1회 | |
| 경찰장구 | 사용요건·작동요령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회 | |
| | 방패·전자방패 | 사용요건·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1회 |
|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 |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 | 경감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자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표 12>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 2(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

| 경찰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
| 경찰봉·호신용경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 1회 이상 |
| 방패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 | 1회 이상 |

※ 자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 제17조 [별표 1] 참조

여기서 교육빈도란 중 “부서발령시”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서에 발령된 때를 말하며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속 경찰관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부서발령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경찰대학장 및 경찰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하여도 신규임용과정교육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찰교육 훈련계획(2015)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신입경찰(순경, 경장)의 경우 1일 7시간 총 34주 1,19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 중 장비교육은 직무과목 중 무도, 체포술, 호신술 과목에서 총 98시간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장구활용은 체포 대상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술로 인체의 위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관의 경찰장구 사용교육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일정기간 상당한 교육시간을 보장받으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경찰장비 교육기관에서는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에게 경찰장구인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의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을 부서발령시 1회, 외근·기동대 요원에게는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의 경우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을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교육기관에서는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장비의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성 검사는 첫째,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원리 둘째,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셋째,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넷째,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의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위해성 경찰장비 중 대표적으로 경찰장구인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안전검사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

| 경찰장비 | | 검사내용 | 검사빈도 |
|------|-----------|--|------|
| 경찰장구 | 경찰봉·호신용경봉 | 1.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 경봉은 폼을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퍼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 반기1회 |
| | 방패 | 균열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반기1회 |
| 분사기 | 가스 | 1.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 반기1회 |
| | 분사기 | 2. 약제통의 균열 유무 | |

※ 자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2] 참조

III. 민간·공경호경비 장비사용 제도의 문제점 비교분석

1. 장비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민간경호경비원이 휴대는 경호경비 장비는 범죄인 대응과 신체 및 재산보호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민간경호경비 장비선택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사용기준을 공경호경비 장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민간경호경비, 경찰 장비사용기준 현황

| 구분 | 사용기준(경찰봉, 호신용 경봉기준) |
|---------|---|
| 민간 경호경비 |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없음 |
| 경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 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자료: 경비업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민간경호경비와 공경호경비의 장비사용기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국가경찰은「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장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와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경찰은 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8조(경찰봉, 호신용경봉) ‘경찰봉, 호신용경봉은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 관리한다. 그리고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첫째, 범인의 검거 및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경찰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경찰봉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등의 임의적인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하며 넷째,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별도의 운용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2. 경호경비 장비의 교육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법 교육은 장비의 사용요건, 사용기준 등을 교육하고 민간경호경비 업무영역 범위 내에서 민간경호경비원 자기보호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정당하게 경호경비 장비가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15> 민간경호경비, 경찰 장비교육 현황

|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
| 민간 경호경비 (일반경비원 기준) | 장비사용법 (사용기준) | 일반경비원 신입교육대상자 | -신입교육시 1회(2시간) -직무교육시 경비업자 자율 |
| 경찰 (경찰봉· 호신용경봉 기준)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 경찰장비사용기관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경찰교육기관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 정교육대상자 | -경찰장비사용기관 부서발령시 1회, 외근·기동대요원은 반기 1회 -경찰교육기관 1회 이상 |

※ 자료: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참조

그래서 「경비업법」에서는 민간경호경비원의 범인제압 및 호신 능력향상 확보를 위하여 장비사용법 과목 및 시간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이 경찰장구 교육빈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경호경비는 신입교육 시 단 1회에 걸쳐 장비사용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민간경호경비원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변동하는 치안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무과정 동안 계속되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교육의 목적은 관련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치안여건 변동에 따른 대처능력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 기술습득 그리고 가치관과 민간경호경비원의 윤리와 자질을 확립하는데 있다(김정만, 2009).

하지만, 민간경호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민간경호경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경비업자의 지도·감독 하에 교육을 이행하게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상 경비업자의 자율적 이행만 기대할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인력부족과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박길준, 2006).

3. 경호경비 장비의 안전검사

현재 민간경호경비에서는 휴대 및 사용 중인 경호경비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경찰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개정(2014.11.19.) 하였듯이 장비의 사용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여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그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민간경호경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종류와 비교하여 위해성 경찰장비 중 대표적으로 경찰장구인 경찰봉·호신용경봉, 방패와 분사기 안전검사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민간경호경비, 경찰 장비안전검사 현황

| 장비 | 검사내용 | 검사빈도 |
|--------------------------------------|---|---------------------|
| 민 간 경 호 경 비 장 비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허가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단체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초 1회 확인 허가사항 |
| 경 찰 장 구 · 분 사 기 | 경찰봉·호신용경 봉 1.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 경봉은 뾰를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 반기1회 |
| | 방패 균열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반기1회 |
| | 가스 분사기 1.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2. 약제통의 균열 유무 | 반기1회 |

※ 자료: 경비업법 시행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2] 참조

국가경찰은 경찰봉·호신용 경봉 등의 경찰장구는 반기 1회로 검사빈도를 규정하여 점검관리하며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 또는 수리 등을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성 경찰장비 관련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간경호경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장비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비사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인하여 많은 사고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V.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개선방안

1.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사용기준 명확화

민간경호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경호경비를 의뢰하는 의뢰인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를 지불하고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민간경호경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권한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성용(2007)의 연구는 민간경호경비 업무가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민간경호경비원의 권한에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민간경호경비원은 보편적 권리인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의한 방어 및 보호는 사인신분으로서도 가능하겠지만 민간경호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을 초래할 만한 우발적 범죄행위를 저지하려는 사람을 제지하고 예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사용에 있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장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향 설정과 경비업 실무현장에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장비별 사용기준의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호경비 장비의 사용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규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경찰의 경우 1953년 12월 14일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장구의 사용 조항을 명시하고,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을 위하여 사용 중인 경찰장구·무기 등을 포괄한 장비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장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1999년 11월 27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경찰장비 중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였다.

특히 사용기준에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와 불법집회·시위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인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와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용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민간경호경비 상황 시에도 이를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호경비 성과달성과 경호경비 장비사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경비업법」제15조2(경비원의 의무)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휴대장비를 가지고 경호대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에게도 먼저 물리적인 공격이나 제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휴대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성격만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정태황과 이선기(2007), 김태연(2013)의 연구에서 경호상황 시 경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호경비 업무 상 공격자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장비의 휴대가 필요하다는 적합성의 원칙, 피해자의 위해수단과 강도의 파악이 어렵다는 경호적 특성에 의해 위해를 방어하고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단봉, 분사기, 방패 등)를 선택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의 원칙, 상대방이 장비를 들고 위협하지 않는 이상 민간경호경비원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장비를 사용해야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성공적인 민간경호경비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기준을 명확화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7>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사용기준 개선 안

| 장비 | 장비의 사용기준 |
|---------|---|
| 1. 단봉 | 타인 또는 경호대상자 및 경비원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장비나 무기를 무력화 할 목적으로 사용” |
| 2. 분사기 | 타인 또는 경호대상자 및 경비원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원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안전방패 | 타인 또는 경호대상자 및 경비원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물리적 공격을 방어하거나 시설의 무단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2.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교육개선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비에 관한 교육은 “장비사용법” 2시간으로 편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교육은 월 4시간, 경비지도사에 의해 경비업체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과목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에서 이론과 실무,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찰교육 훈련계획(2015)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신입경찰(순경, 경장)의 경우 1일 7시간 총 34주 1,19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 중 장비교육은 직무과목 중 무도, 체포술, 호신술 과목에서 총 98시간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장구활용은 체포 대상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술로 인체의 위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관의 경찰장구 사용교육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일정기간 상당한 교육시간을 보장받으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경찰장비 교육기관에서는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에

게 경찰장구인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의 사용요건 및 안전 수칙을 부서발령시 1회, 외근·기동대 요원에게는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근접분 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의 경우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을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교육기관에서는 경정이하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경호경비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민간경호경비 장비에 관한 교육은 신입 교육 이후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민간경호경비원을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매우 낮고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교육편성 및 시간의 문제 뿐 아니라 경비원을 교육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 양성과 평가 시스템의 미흡, 경비협회와 경찰교육원을 제외한 신입경비교육 연수기관의 유동성, 직무교육의 체계화와 점검 시스템 등 산업 전반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경미(2008)와 박성수(2015)가 주장한 것처럼, 미흡한 교육시스템에서 민간경호 경비원의 장비사용 능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비사용 교육을 인증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찰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종합학교 또는 관서별 직무교육장 등의 경찰교육기관 시설과 전문지도자를 활용하여 민간경호경비와 경찰의 유기적 협조체제, 민·관이 연계된 체계적인 경호경비 장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직무성격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민간경비 업무가 경호경비 장비의 보급과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도 맨손 호신술에서 경호경비 장비를 활용한 체포술과 흉기난동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기술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호경비 장비의 실습교육은 민간경비 업무에 상당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교육기준 개선 안

| 구분 | 교육내용 | 현행 | 개선 안 |
|-----------------------------|---------------------------|--|--|
| 민간 경호경비 (일반경비원 기준) | 장비사용법 (사용요건 및 사용기준) | - 신입교육시 1회(2시간) - 직무교육시 경비업자 자율 | - 신입교육시 1회 이상(4시간) - 직무교육시 장비운용시 반기 1회 |

따라서 민간경호경비원의 필요이상 행위는 과잉방위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함으로 장비사용법 교육 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경찰의 장비교육을 모티브로 하여 신입 경비원 교육 시 1회 이상,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직무교육 시 반기 1회로 교육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안전검사기준 마련

경찰의 경우 1999년 11월 27일 제정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경찰장비의 안전검사)에서 동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 11월 21일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74호)에 명시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필요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경찰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민간경호경비의 경우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2항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는 최소 경비업의 허가 시에만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인 경호경비 장비의 안전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명 및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의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안전문제 대해서는 위해성 경호경비 장비로 규정하고 주기적

인 경호경비 장비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안전검사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비별 기준사항을 도입하여 반기 1회 검사내용과 빈도에 맞춰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안전검사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9> 민간경호경비 장비의 안전검사 개선 안

| 장비 | 검사내용 | 검사빈도 |
|----------|---|----------|
| 단봉 | 1.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 경봉은 썼을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 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 반기 1회 |
| 안전 방패 | 균열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
| 분사기 | 1. 안전장치의 결합 유무 2. 약재통의 균열 유무 | |

또한 추가적인 범죄나 테러를 예방하고 기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민간경호경비 산업에 새로운 장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도입하려는 경우 경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하며, 외부 전문가가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관할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실질적인 도입의 여부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복합적인 신규장비 안전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 론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경제활동에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생활보다는 삶의 질 및 문화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 생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및 재산보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 안전의식이 점차 증가됨으로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경호경비

가 그 수요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된 민간경호경비는 현재 점진적으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인 「경비업법」을 바탕으로 생활안전과 재산보호 등의 역할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민간경호경비 업무는 경비대상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경호경비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경호경비원은 경호경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인 근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장하였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원 장비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판단 하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경호경비의 경찰장비에 대한 사용기준과 비교해 볼 때 민간경호경비원은 경호경비 장비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나 그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최근에는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의 장비남용으로 불법용역 폭력 사태까지 발생되어 민간경호경비 업무가 국민들의 불신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범위 및 시기, 장비별 사용방법에 대한 법적인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원의 신입·직무교육의 장비사용법 시간과 교육빈도수를 강화하여 경호경비 장비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경호경비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으며 그중에는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비사용법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과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제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의 불확실성은 국민들을 비롯하여 경호대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호경비원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 중인 경호경비 장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호경비에서는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 이후 경호경비 장비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리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장비의 파손이나 손상 등에 의하여 장비사용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호경비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경호경비 장비의 도입도 예상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태연 (2013). 대한민국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만 (2009). 위기관리를 위한 경호무도 교육훈련 체제 정립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길준 (2006). 한국 민간경호 교육훈련 실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 (2015). 경비업법 개정방향 논의: 경비원의 직무와 권한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33호.
- 박준석 (2010).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경미 (2008).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용 (2007).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 정태황, 이선기 (2007). 경호업무시 경호장비의 적용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 채인길 (2014). 민간경비 호신체포술. 진영사.

2. 기타자료

- 경비업법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95호, 2015.10.20., 일부개정]
- 경비업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6호, 2015.9.24.,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960호, 2015.1.6.,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6601호, 1999.11.27., 제정]
- 용역경비업법 [법률 제2946호, 1976.12.31., 제정]
-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 청원경찰법 [법률 제12921호, 2014.12.30., 일부개정]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68호, 2016.5.17., 일부개정]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타법개정]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2016년 6월 15일 검색).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16년 6월 15일 검색).

【Abstrac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roblems of
use of security equipment

Ku, Hui Yeong*·Son, Yeong Gak**·Jo, Min Hee***

In modern society, leisure activities are actively made rather than economy-focused life in the past du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cultural level. As a result, attention is focused on individual life, safety of body, and protection of property. By being a gradual increase in safety awareness in these social changes greatly increased the demand of public order, but public law enforcement began to show limitation in meeting such deman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naturally developed private security guards are striving to serve the current demand and gradually increases and the legal basis on which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safety, "security industry act".

The first pri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to ensure safety and security of the target as the first priority. As private security guards can use security equipment for effective security guard job, guards should make the most of it within legal basis.

In this paper, we argue the following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needs of those using private security guard equipment.

First, by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the use of security equipment by private security guards to enable the equipment to be used under a clear judgment.

* Yong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1st Author)

** Yong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Corresponding Author)

***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structor (The Corresponding Author)

Second, education of security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time and frequency of equipment usage education.

Finally, the advanced security should be introduced with security equipment incorporating the latest technologie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Key Words: Private security expenses, Equipment use, Usage criteria,
Equipment education, Inspection criteria

경찰의 민간경비 감독명령 개선방안

정 지 덕 · 하 정 훈 · 김 영 현

경찰의 민간경비 감독명령 개선방안

정 지 덕*·하 정 훈**·김 영 현***

[국문초록]

민간경비 협력차원에 있어 경찰의 지도·감독 사항을 개선하여 고객 및 의뢰자에게 다양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경비원들이 효율적으로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여 경비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도·점검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배치신고 허가 시 사전 서류검토 및 교육, 집단민원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역할, 담당 경찰관의 지도·점검 시 주관적 행정처분,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활용과 경비지도사 권한의 설정 방안을 제시하여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 사용기준, 장비교육, 검사기준

* 김포대학교 외래교수(제1저자)

** 중원대학교 경호학과 교수(교신저자)

*** 김포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공동저자)

| 목 차 |
|-----|
|-----|

- | |
|---|
| I. 서론 II. 「경비업법」 배치신고 및 감독명령 III. 감독명령 개선방안 IV. 결론 |
|---|

I. 서 론

현대사회의 변화와 발전과 동시에 급진적인 변화에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해 개인은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공권력의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국민의 치안 수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전체적인 민간경비 산업의 필요성은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민간경비 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강영숙, 2016).

민간경비 산업의 양적인 성장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민간경비시장은 영세업체의 난립과 경쟁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의 지도·감독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업체에 이익 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으므로 민간경비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찰의 지도·감독 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기에 경찰의 지도·감독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주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경비의뢰가 들어와도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진행요원 또는 인력파견의 형태로 경비원을 대체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민간경비 산업 형태를 음성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들의 비 전문성을 야기시켜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협력차원에 있어 경찰의 지도·감독 사항을 개선하여 고객 및 의뢰자에게 다양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경비원들이 효율적으로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여 경비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경비업법」 배치신고 및 감독명령

1. 「경비업법」

「경비업법」은 경비업에 대한 허가사항 및 직무범위와 종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경비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법의 한 부분으로,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명 「용역경비업법」으로 법률 제2946호로 제정되어 1977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신규 제정이유는 ‘국가의 중요시설·공공시설·산업시설·사무소 등 경비가 필요 하는 시설물의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¹⁾. 또한 1999년 3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전문경비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경찰연구논집, 2008).

경비업무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²⁾.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 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9월 10일 검색).

2) 「경비업법」 제2조(정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표 1> 경비업체 현황(개) 경찰통계자료

| 구분 | 업체 수 | 업종 계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 | 특수경비 |
|------|-------|-------|-------|------|------|------|------|
| '14년 | 4,287 | 5,040 | 4,184 | 40 | 538 | 139 | 139 |
| '15년 | 4,449 | 5,203 | 4,338 | 38 | 540 | 146 | 141 |

※ 자료: 사이버 경찰청, 2016.

2. 배치신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신입교육을 이수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8조 ①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비원 중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중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 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 제1항의 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⑦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입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때 제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제7항을 위반하여 신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의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2 ①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 2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 이수증(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입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 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 까지 배치허

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 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명령

(1) 감독명령

「경비업법」 제24조(감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순회 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반 시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제24조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경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경비업법」 제24조 ②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와 출장소, 경비원 배

치지가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무상황과 교육훈련 상황 등이며 주의할 것은 점검 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경찰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도·점검 전 사전파악으로 지도·점검 경찰관은 해당 대상시설을 점검하기 전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지도·점검에 당해야 완벽한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획득해야하며, 현장지도·점검 시에는 「경비업법」 위반사항은 그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구분될 수 있고 적발여부는 점검 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의한다. 즉,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다는 큰 잣대를 가지고 경비업 담당자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로 행정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행정 지도로 전환하여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표 2> 경비업 지도·점검 주요사항

| 순번 | 주요 점검사항 |
|----|--|
| 1 | 대표자 및 임원·정관목적·주사무소 변경 |
| 2 | 경비원 신입교육 미 이수자 배치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
| 3 | 정기적인 직무교육, 교육계획·직무교육대장·실시결과 |
| 4 | 교육장·장구 등(시설 등 기준), 허가조건 등의 유지 |
| 5 | 경비원 명부(비치여부) 정리기록(기재사항, 사진부착) |
| 6 | 결격자 배치,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경비지도사 선임 |
| 7 | 기계경비업체 경보수신 현장 도착 조치결과 등 감독명령 |
| 8 | 호송경비업체 호송규칙 등 감독명령 |
| 9 | 경비원 복장(이름표, 표지장 부착), 경비업법 제반규정 준수여부 확인 |
| 10 | 경비지도사 지도·감독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유지, 순회점검 및 감독 |

※ 자료: 대구지방경찰청, 하반기 지도점검 대비 설명(안), 2016.

5.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소정의 교육 44시간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기계 경비지도사를 말한다³⁾.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위키백과, 2016).

(1) 결격사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³⁾.

첫째,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둘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셋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넷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섯째, 범죄단체 등의 조직, 범죄 등의 구성·활동,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특수 강도강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섯째,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 상해·치상, 강도 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미수범,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곱째,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절도, 야간침입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덟 번째,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3)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4) 「경비업법」 제10조.

(2) 선임기준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고,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⁵⁾.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⁶⁾.

첫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둘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셋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넷째,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다섯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⁷⁾을 보면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고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으로 첫째,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⁸⁾을 이수한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경비지도사 및 기계 경비지도사를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도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 지방경찰청은 서울 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5)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6) 「경비업법」 제12조.

7)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

8)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III. 감독명령 개선방안

1. 배치신고 허가 시 사전 서류 검토 및 교육

경호·경비는 개인·기업 및 단체의 내·외부에 있는 물건의 도난이나 파괴행위 및 생명과 재산을 위협으로부터 의뢰인 및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경호·경비는 해당 업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비는 건물 안에는 경비를 채용하여 건물의 안전과 보호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경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경비원 배치신고는 경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비원을 해당 근무처에 배치한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함이며, 경비의 목적 및 내용, 배치한 경비원의 업무,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 시 등을 기록한다. 배치신고는 관할경찰서에 민간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생활안전계에서 배치허가를 결정한 다음 배치허가가 인정되면 담당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배치된 시간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와 배치된 경비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담당경찰관은 현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도가 아닌 단속으로 여겨진다.

배치신고가 들어오면 허가이전에 관계자인 경비업체 대표 및 경비지도사를 호출하여 경호계획서 또는 경비계획서, 재해대처계획서 등을 함께 사전 검토하여 안전진단을 평가하고 경찰의 협조사항과 지도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경비업무수행에 관련한 감독사항을 지시하고 배치여부의 타당성을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48시간 전 배치신고를 받은 경비원에 대한 조회(이수증 및 범죄이력 조회 등)를 철저히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현장 지도·감독 시 경비업체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점을 지도하여 불법적인 폭력이나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찰의 협조사항과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2. 집단민원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역할

집단민원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침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배치하고 경찰은 경비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 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비원이 배치되는 현장에 지도·점검은 보편적으로 담당경찰관 1명 또는 2명이 배치되는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지도·점검하는 실정이다. 집단민원현장은 보통 최소 20인 이상 또는 100명이상의 민간경비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주하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교육차원에서 민간경비원들을 모두모여 집체교육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근무 중에 있는 민간경비원들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현장교육에 임하고 있으므로 자기담당구역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민간경비 특성상 계약과 계약에 이루어진 신의성실에 위배되며, 근무시간에 경비근무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은 의뢰인이 보는 관점으로는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의뢰인·경비업체·경찰관 모두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경찰관은 관내에 배치신고가 두 군데 이상일 경우 담당경찰관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장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형식적인 지도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담당 경찰관을 경비원 수에 비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 또는 상주하는 담당경찰관을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경비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현장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민간경비원이 배치신고가 되었다고 배치장소에서의 사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과 같은 신분이기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업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의 마찰과 민원사항에 한계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이 상주하여 지도·감독하여 범죄예방 및 즉각 조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3. 담당 경찰관의 지도·점검 시 주관적 행정처분

경찰의 지도·점검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지만,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병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사례로 집단민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연행사장에 시설보호 및 혼잡예방을 목적으로 경비원을 100명 이상 배치한 현장에 담당경찰관 1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장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지시하였는데, 복장은 정장으로 색상은 검정으로 신청하고 넥타이 색을 통일하였고, 이름표 및 회사상호를 명시하는 이름표를 만들어 표시하였는데, 경찰관은 색상을 가지고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위반되었다는 이유였다. 단속된 색상은 짙은 곤색으로 육안으로 보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임을 구분할 수 있는 복장으로 판단하였으나, 복장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하여 단속되었다면 교육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데 담당경찰관은 지도·점검이 아닌 행정처분의 단속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지는 사건이었다.

<표 3>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 시설 등 기준업무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
| 시설경비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호송경비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 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신변보호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 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
| 기계경비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 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1억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신 장치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

| | | | | |
|--------|-------------------------------|--------|--------------------------------|-------------------------------------|
|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관제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자료 :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 2017.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장비 등의 란에 의하면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를 허가사항의 일부로 두고 있다. 복장을 20벌 이상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인데,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의 경우 배치신고에 복장에 관하여 신고를 정장으로 하고 색상을 검정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경우 개인의 크기와 몸집이 다르기에 개인의 정장을 입도록 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4항⁹⁾에 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는 경우 문제는 담당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지도·점검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의 활용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 88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또한 과거에 경비원 신입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는 교육기관별로 상이하여 한국경비협회의 경우 1인당 12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별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의뢰인의 경비 신청에 의해 경비원을 배치된 현장에 담당경찰의 지도·점검 시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의 조회와 신분증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있다. 일반현장은 배치

9) 「경비업법」 제19조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 집단민원현장은 48시간 전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배치하는데 경비원들의 이수증의 조화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담당경찰은 범죄조회만 하고 이수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은 배치된 명부에 의해 이수증과 신분증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림 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현재 이수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데 크기는 A4 사이즈로 교부되고 있다. 경비원들은 이수증을 소지하기 힘들고 이수 번호를 외우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담당 경찰관은 원본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경찰관들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수증을 신분증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수증 발급을 A4사이즈와 주민등록과 비슷한 크기의 신분증 대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신규 발급되는 이수증에 사진, 성명, 이수번호,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관을 표기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일반 신분증이 아닌 민간경비 지도·점검 시와 배치된 근무지 외에는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민간경비원이 배치되면 근무시간에는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배치시간 종료 시에는 반드시 패용을 철회하여야 한다.

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의 민간경비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주민등록증 확인과 이수증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배치된 경비원은 새로 도입된 신분증을 휴대와 보관이 용이할 것이며, 민간경비원들의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므로 누구나 신분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경비지도사 권한의 설정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담당경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기에 담당경찰관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시험절차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경비원을 지도·감독하여 경찰의 공권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임에도 경비지도사 신분은 민간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같은 신분이다. 경비지도사는 담당경찰과는 달리 배치되어 폐지 시 까지 현장에 지속적인 근무를 하며 경비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건의 해결이나 분쟁에 해결 요소로는 될 수가 없는 존재이며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가자격인 경비지도사를 배치장소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출입통제에 대하여 일정부분 권한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혼잡예방을 위하여 시큐리티 라인을 설치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시민이 훼손 또는 무단으로 출입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노동쟁의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폭력 및 점거 시 사건에 대한 기록 및 촬영을 방해 받지 않도록 신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기록에 대한 촬영물을 탈취 할 수 없게 하여야 된다.

IV. 결론

「경비업법」 제24조(감독)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점검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경비업법」 제1조(목적)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담당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배치신고 허가 시 사전 서류검토 및 교육을 통해 배치신고가 들어오면 허가 이전에 관계자인 경비업체 대표 및 경비지도사를 호출하여 경호계획서·경비계획서, 재해대처계획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진단을 평가하고 경찰의 협조사항과 지도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경비업무수행에 관련한 감독사항을 지시하고 배치여부의 타당성을 결정을 하여 현장 지도·감독 시 경비업체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점을 지도하여 불법적인 폭력이나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경찰의 협조사항과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민원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역할로서 집단민원현장의 행사장의 경우 다중이 운집하다보니 혼잡으로 인한 위험과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노동쟁의 현장, 주주총회, 특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하는 장소에서는 폭력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곳에 공권력을 대신하여 민간경비원이 안전과 질서를 위해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경찰이 투입되어 해결하는 방식은 범죄예방적인 측면이 아닌 범죄를 유발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한계로 보완하는 치안서비스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민간경비업체 또한 지나친 영리추구보다는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의성실에 의해 근무해야하며, 담당경찰관이 상주하여 지도·감독하여 범죄예방 및 즉각 조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담당 경찰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민간경비의 현실성을 이해하고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감독기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경비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담당 경찰관의 지도·점검에 민간경비업체의 경우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에 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희박 하고 편법을 이용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경비업체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의 지원요청도 받고 폭력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생각으로 경찰에 배치신고를 하고 있는데, 담당경찰의 주관적인 지도·점검은 실적위주와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비쳐주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경비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넷째,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의 활용에서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 이수증에 사진, 성명, 이수번호,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관을 표기하여 민간경비원의 통일된 이수증의 신분증화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이수증은 지도·점검 시 담당경찰관의 확인과 배치지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되고, 폐지 시 및 퇴근 후에는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만들어 한다.

새로 도입되는 신분증으로 민간경비원들의 긍지와 자부심도 향상될 것이고, 민간경비원들의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므로 누구나 신분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비지도사의 권한의 설정으로 경비지도사는 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 선임기준 등을 통해 국가자격을 소유하였지만, 신분은 일반시민하고 똑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것 이외에 배치지안에서 일정부분 통제권을 주어 경비업무에 일정부분 마찰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영숙 (2016). 탐정실무. 진영사

안황권 (2010).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이창무 (2006).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최석오. (2012).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2. 기타자료

사이버경찰청 (2017). 경찰통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6년 9월 10일 검색).

대구지방경찰청 (2016). 하반기 지도점검 대비 설명(안).

위키백과 (<http://www.ko.wikipedia.org>, 2017년 9월 10일 검색).

【Abstract】

Improvement of Supervisory Command of Private Security by Police

Jung, Ji Deok* · Ha, Jeong Hoon** · Kim, Young Hyun***

The goal of instruction and inspection is to improve supervision of police in private security cooperation, providing various security services to clients and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private security employees can perform their tasks efficiently, promoting the expertise of security firms and employees and growing security industry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event illegal act of security firms and to expose and regulate violation of Security Industry Act, but also to provide adequate administrative instruction in order to develop security industry which is the goal of Security Industry Act and to guide security firms to achieve their administrative goals by objective decisions not by subjective decision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by providing education and review of documents before the approval of arrangement, the role of police in on-the-spot instruction and inspection of collective petition, subjective administrative measure in instruction and inspection of police, utilization of certificate of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employee and setup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supervisor.

Key Words: Private security, Use of equipment, standard of use, education of equipment use, standard of inspection

* Kimpo University Instructor (The 1st Author)

** Jungwon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 Kimpo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Security Administration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부 록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123
- 논문집필요령 129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44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149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168
- 논문투고 일정 169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 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0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 평가기준 | 등급기준 | 매우 미흡 | 다소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점수 |
|----------------------|------|----------|----------|--------|-------|----------|----|
| | 점수 | 0 ~ 4 | 5 ~ 8 | 9 ~ 12 | 13~16 | 17~20 | |
|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 | | | | | | |
|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 | | | | | | |
|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 | | | | | | |
|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 | | | | | | |
|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 | | | | | | |
| 총점 [/100] 점 | | | | | | | |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 구분 (점수) | 게재 확정 (91-100) | 수정후 게재 (81-90) | 수정후 재심사 (71-80) | 게재불가 (0 ~ 70) |
|-------------|-------------------|-------------------|--------------------|------------------|
| 해당란에 0표시 | | | | |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 | | |
|-------------------|----------|--|-----------|--|------------|--|----------|--|
| 논문제목 | | | | | | | | |
| 심사결과 | 게재 확정 |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 |
|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 | | | | | | | |

[별첨 2]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 절 차 | 처리기간 | 누적처리기간 |
|---------|----------|---------------|
| 원고심사배정 |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 ↓ | | |
| 심 사 의 회 | 송부기간 5일 |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 ↓ | | |
| 심 사 | 심사기간 2주일 | |
| ↓ | | |
| 심사결과접수 | 회송기간 5일 |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 ↓ | | |
| 게재여부결정 | 3일 |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 ↓ | | |
| 1차수정지시 | 7일 |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 ↓ | | |
| 수정원고접수 | 7일 |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 ↓ | | |
| 2차수정지시 | 3일 |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 ↓ | | |
| 수정원고접수 | 3일 |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논문집필요령

I. 논문형식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 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 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1) 논문의 제목

-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 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2) 저자명과 소속

-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

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3) 요약 및 주제어

-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안에 위치시킨다.
-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4) 목차

-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한다.
-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5) 본문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게),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II.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1. 일반 문헌의 경우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모리야마 타다시(守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연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I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쉼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
 ‘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3)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III.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1) 저자명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섬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 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쉼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쉼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1) 정기 간행물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사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자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

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⑤ 미간행 발표 자료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⑥ 역서와 편역서의 경우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⑦ 초록 문헌의 경우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예) 논평자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료의 형태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 역(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쉼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뺀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IV.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V. 기 타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

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 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

상)에 1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적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 수정 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

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를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

고 속이지 않는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는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으로 한 여려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프린스턴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에 조사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정 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논문투고 일정

| 순서 | 전반기 | 후반기 |
|--------------------|--------------------|----------------------|
|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 4월 30일 / 6월 30일 | 10월 31일 / 12월 31일 |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
합)
-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
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치영 (010-9263-2702/knspsa2014@gmail.com)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 | | | |
|--------------|--------------|-----------------|---------------|
| 곽대훈 (충남대) | 김도우 (경남대) |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 김태훈 (정신여대) |
| 이 훈 (조선대) | 이창배 (울산대) | 장성준 (베일러대) | 장항배 (중앙대) |

편집위원
Dr. Bankole Cole(영국)
(The Department of Law and Criminology, Sheffield Hallam University)

Dr. David Baker(호주)
(Federation University at Australia)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3호

| | |
|-------|--|
| 인쇄일 | 2016년 12월 28일 |
|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
| 발행인 | 박준석 |
| 편집인 | 윤민우 |
| 발행처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449-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 koreasoulist@gmail.com Homepage http://www.knssa.com |
| 인쇄처 | 백산출판사 |
| 전 화 | (02) 914-1621(代) |
| F A X | (031) 955-9911 editbsp@naver.com www.ibaeksan.kr |

비매품

